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July vol. 115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균형 있는 재정 배분의 길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앙-지방-교육
재정 배분의 방향을 조망합니다.”



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2026 July

vol. 115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중앙-지방-교육 재정 배분의 방향을 조망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두 교부 재원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의 방향을 조망합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혁신본부 재정정보분석부 | 02-6908-8632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한 | 02-426-6810

재정
MON NOW

04

재정 칼럼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의 역할

-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제언

-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16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7월호 기준

20

이달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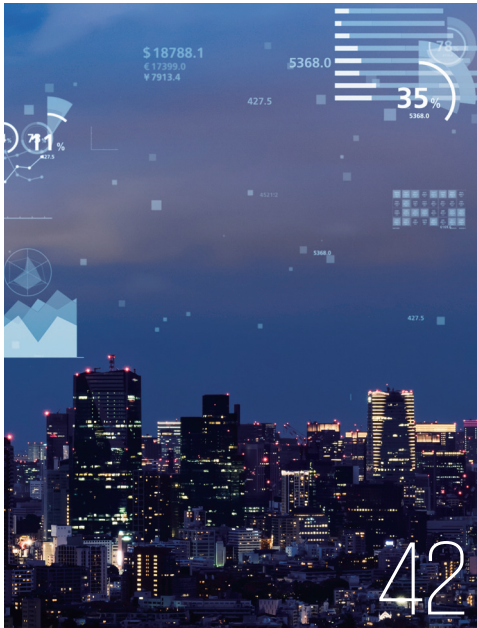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40

재정 캘린더





FIS 재정

66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68
재정정보원 소식

70
애독자 코너

재정 NAVIGATION

42
재정제도 이야기
정책금융과 재정 이야기
- 박정수 이화여대 연구·대외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48
재정이 MONEY
지능 공장의 시대,
데이터센터 진화에 따른 재정 정책 과제
- 이상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4
역사 속의 재정관리 이야기
『호서대동사목』을 통해 본
대동미의 지출구조 - 중앙편
- 최주희 덕성여대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60
남산 동상, 그 역사 속으로
퇴계 이황, 재정은 신뢰다
-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중앙-지방 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의 역할

: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편 방향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지방교부세의
균등화 기능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필요



재정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지역의 자생력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편



서론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재정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이 확대될수록,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줄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지방재정이 자리잡은 후 계속 되고 있다. 공동체 유지의 관점에서 지나친 격차를 당연시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단순한 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과 지역경제의 발전 유인을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과거와 같은 왕성한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점차 노령인구 중심의 정태적 사회로 변모해가는 동시에 지속되는 재정 적자 기조가 10년 전부터 고착화되고 있어 더 이상 기존의 관점만으로 사회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다소 새로운 관점에서 지방재정에 대해 논의하려는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며 기존에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지방재정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와 다르더라도 전혀 반대를 위한 글이 아닌 만큼 넓은 양해를 바란다.

지방재정의 이론적 기초는 Musgrave(1959)에서 보듯이 경제의 안정화와 재분배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자원배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Tiebout(1956)의 ‘발로하는 투표(Voting with Feet)’라는 이론적 틀에서 출발한다. 주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 수준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경쟁은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기본이 된다. 이후 Oates(1972, 1999)의 분권화 정리는 지역 간 선호가 상이한 경우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이론은 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 연방제 국가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과세권 확대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풀뿌리 민주제와 연결되는 이상적 제도로 인식되어 왔다. 본 관점에 따르면 대규모의 정부간 이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기존 국가들과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오랜 중앙집권 국가였으며 산업화 과정에서도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집적경제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재정은 지방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발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Baldwin and Krugman(2004)에 따르면 집적이 일종의 ‘경제적 지대(Rent)’를 창출하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일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는데 집적에 따른 이득이 외부성을 창출하므로 일부 과세하더라도 집적의 이득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재원을 마련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물론 집적의 이득을 어떻게 모형화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한국의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 이론적 지지를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의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일본이 경험한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채무의 확대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방교부세와 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국고보조금과 달리 구체적 용도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적어도 한국의 맥락에서 지방교부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 재정력 균등화(Equalization)이다. 지역별 세수 기반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지방세율에서도 확보되는 세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모든 최소한 재원 운용이 그러하듯이 재정조정제도는 항상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상충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항시 양자의 균형이 깨질 때 이를 조정하려는 방식으로 정상적 사회에서는 압력이 작용한다. 재정력이 낮은 지방에 지속적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세원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재정학에서는 이를 ‘연성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또는 재정 의존성의 문제로 설명한다. 또한, 이미 자발적으로 이동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황에서는 제도화된 기존의 교부세 방식에 집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심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유가 어떠하든 이미 공동화되어 버린 지역에 과거와 같은 지방지원제도가 적절한 자원 배분이 되기는 어렵고 새로운 방식의 지원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교부세 의존도가 높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세입보다 이전재원의 비중이 훨씬 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모두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배분 방식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노력을 충분히 유인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형평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책임성과 성장 유인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제도의 경직성

지방재정이전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고도성장기 학령인구가 급증하던 시기에 국가재정의 제약 속에서도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산업육성이 국가재정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컸다. 따라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자동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는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측면, 특히 인적자원에 의존한 경제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환경은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학생 수 감소 속에서 교육재정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유사한 비율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자동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교육청에서 막대한 기금이 적립되거나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례는 제도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문제로 자주 언급된다. 물론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교육투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원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자동 배분 구조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는 정책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지방정부에 잘 투입하면 좀더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비록 재원의 규모에 손대지 않더라도 적절한 재원의 재 활용(Fiscal Revenue Recycling)을 통해 후생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육 재정이나 지방재정은 오랫동안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가치와 결합되어 왔기 때문에 제도 개편 자체가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수반될 것을 우려한다. 그 결과 시대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제도는 과거의 틀을 유지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을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해볼 때, 국가가 보유한 고유의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 기능의 포기는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일본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많은 경우 그러하듯이 우리나라가 특히 주목해야 할 사례는 일본이다. 일본 역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 이전을 폭넓게 활용해 왔으며, 버블경제기를 거치면서 지방 인프라 투자와 지역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되었고 투자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시장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투자처에 재원을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후 장기 불황과 인구감소 속에서 이러한 지방재정 구조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는 지방재정제도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로부터 시작된 장기 저성장,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 반복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반복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

다. 그러나 일본재정의 가장 특징적 키워드로 요약되는 지방재정 이전과 지역개발 중심의 재정운용이 장기적으로 국가부채의 증가를 낳는 경로로 자리매김하면서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점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단순히 인과관계로 이해하기보다는 버블붕괴이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지방재정 이전과 지역개발 중심의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가부채가 급속히 쌓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일본은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하에서 오랜 숙고 끝에 이른바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하였다. 국고보조금 축소, 지방세 확충, 지방교부세 조정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며 여전히 이미 공고히 정립된 부채누적 구조를 깨뜨리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고민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의 생산성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일부



초기 실증분석 결과도 적어도 시장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투자처에 재원을 투입하는 사례는 많이 줄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유사한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후발국이며 지방재정의 운용방식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이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한계와 성과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봐야 한다.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방향

오랫동안 적응해온 기존의 관행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로 이행하는 것은 많은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 향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균등화 기능은 유지하되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과 재정건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상받는 구조가 보다 명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과세자율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에 대해 지방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 선호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Tiebout와 Oates가 강조한 지방재정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한다.

셋째, 교부세와 교부금의 배분기준은 단순한 재정력 부족 보완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행정서비스 수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와 재정기반 악화로 독립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간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구조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부채의 규모 자체가 사회 및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행시 지방재정 이전에도 적절한 한계가 작동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국가부채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는 노력이 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비록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이 궁극적으로 안정화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결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제도이며,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였다. 그러나 인구감소, 저성장, 재정수요 확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과거 개발연대에 설계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였다.

한국은 중앙집권적 역사와 자원제약상 수도권 집적경제를 통해 성장한 국가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 왔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역시 시대변화로 초래된 형평성과 효율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두 가치를 새로이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

협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자동화된 재원이전 규칙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전체에 부담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력을 앗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일본의 경험을 단순히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재정이 균형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하에서 지방으로 재원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책임성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제도개혁의 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므로 삼위일체 개혁 수준의 제도개선언은 언제라도 실시하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지방의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사전적으로 강화하고, 더 나아가 비록 과거의 사업이더라도 수익률을 계산하고 시장수익률과 비교하는 시도 또한 강화함으로써 전체적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비록 시장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지방정부의 혁신과 경쟁,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함을 숙제로 안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선택에 책임지는 재정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지방분권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함께 달성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이러한 세부적 조화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 끝으로 본고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균형발전을 포기하지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재정이전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가이다. 향후 지방교부세는 재정격차를 보완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지방정부의 세원확충 노력, 인구유입, 기업유치, 생

산성 향상, 재정건전성 등과 함께 공존하는 성과와 연계된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진화하길 바란다. 작은 차이로 보이겠지만 실제 집행시 매우 다른 환경으로 변모할 것이라 확신한다. 비록 지면 제약상보다 구체적 논의를 생략하지만 기존 관행에 비해보다 넓은 관점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지방재정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최근 거점도시의 육성 또한 이러한 큰 방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Baldwin, R. E., & Krugman, P. (2004). "Agglomeration, Integration and Tax Harmonis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8(1), 1-23.
- Bird, R. M., & Smart, M. (2002).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0(6), 899-912.
-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Annual Report on the Japanese Economy and Public Finance (Productivity-related White Papers, various years)*.
- Doi, T. (2008).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Finance in Japan*. Tokyo: Springer.
- Ihori, T. (2014). *Principles of Public Finance*. Singapore: Springer.
- Musgrave, R. A. (1959).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New York: McGraw-Hill.
- Oates, W. E. (1972).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Oates, W. E. (1999).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1120-1149.
- RIETI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orking Papers*. Tokyo: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 Rodden, J. (2006). *Hamilton's Paradox: The Promise and Peril of Fiscal Feder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 Weingast, B. R. (1995). The Economic Role of Political Institutions: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1(1), 1-31.
- Krugman, P. (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3), 483-499.
- Rodríguez-Pose, A., & Ezcurra, R. (2010). Does Decentralization Matter for Regional Disparities?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5), 619-6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합리적 논의를 위한 제언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변화



내국세 연동에 따른
교부금 변동성



교육의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



합리적 개편과
사회적 공감대



교부금 개편 주장의 배경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는 1972년부터 시행된 이래 유·초·중등 교육의 양적 성장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당시 입법 취지는 ‘중학교 무시험제 시행에 따른 중등 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일부 재정 분야 전문가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교부금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합리적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려는 측에서 주장하는 사회적·재정적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초·중·고교 학생 수의 기록적인 감소가 주요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기존 교부금 제도를 토대로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자원 집중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 세수(20.79%)에 연동되어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나지만, 학생 수는 빠르게 줄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둘째,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꼽고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부금 교부에 따라 다소 여유롭다는 시각이다. 이에 반해 대학의 경우 학교 재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도록 용처가 묶여 있다. 과도한 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은 남아돌고, 기금에 막대한 재원이 적립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은 막대한 초과 세수로 인해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면서 일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남아 기금에 수조 원씩 쌓아두거나, 선심성 교육 지원금(태블릿 무상 지급 등)을 뿌린 점을 지적한다. 이와 반대로 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에 놓였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 재정의 효율성 확보 및 의무 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다. 급격한 세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은 현행 방식의 제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증폭시켰다. 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 경기가 좋아 세수가 넘칠 때는 교육청에 과도한 예산이 가고, 반대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청 예산이 갑자기 수조 원씩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따라 내국세와 무작정 연동하기보다 인구 변화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으로 개편해 국가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넷째, 유보 통합·늘봄학교 등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 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관리)이나 늘봄학교(초등 돌봄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대형 교육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교육 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초·중등 교육에만 한정되던 교부금의 칸막이를 낮추어, 영유아 보육이나 돌봄 서비스 같은 다변화된 교육·돌봄 복지 수요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위의 4가지 시각은 지난 7월 8일 있었던 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의존성과 경직성의 예산 구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주목해야 할 하나는 교육청 예산의 구조다. 구조를 자세히 알아야 이전되는 재원의 규모 중심이 아니라 개편을 통한 정책적 목적의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교육청 예산의 특징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구조 모두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세입 구조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외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내국세와 연동된 수입 구조라는 점이다.

첫째, 교육청은 스스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과세권)이 없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 전체 세입의 약 60~70%이지만 자체 수입(수수료, 자산매각 등)은 1%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규모가 내부가 아닌 외부의 영향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1〉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세입결산액	88,075,985	109,863,207	98,977,319	100,918,300	101,896,1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	61,281,106 (69.6%)	82,207,040 (74.8%)	66,266,474 (67.0%)	65,601,117 (65.0%)	70,881,562 (69.6%)
자체수입(비율)	1,537,898 (1.7%)	1,158,705 (1.1%)	1,098,108 (1.1%)	951,894 (0.9%)	

자료: 각 시도 교육청 결산서

둘째, 내국세 연동에 따른 급격한 변동성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연동되어 자동으로 책정된다. 국세가 많이 걷히면 교육청 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청 세입예산도 이에 따라 급감하는 등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2021년에 비해 2022년은 세입결산액이 전년보다 21.8조 원이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10.9조 원이 감소하며 2년간의 편차는 무려 32.7조 원에 달하고 있다.

세출 구조의 특징으로는 높은 경직성을 꼽을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한 번 편성하면 줄이기 힘든 고정 비용, 즉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세출 결산액의 50~60% 정도가 교원 등의 인건비로 지출된다. 또한, 복지 및 시설 관리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늘봄 학교, 교육 복지 지원사업의 확대와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그린 스마트스쿨 등)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법정·경직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기획하

거나 자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재량 재원의 여력이 제한적이다.

교육청 재정 상황

교부금 제도 개편의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결산서가 지방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지만, 김문수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의 결산서(안)를 취합한 결과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감했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표 1>에서 보듯이 2023년에는 15.9조 원, 2024년에는 0.67조 원이 줄어들었다. 또한, 당초 예산액보다도 교부금이 2023년 8.2조, 2024년 1.4조 원 등 2년 연속 적게 이전되면서 인건비나 기본적인 학교 운영비 같은 고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해결했다.

두 번째는 여유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고갈 위험이다. 2022년 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예산이 급증했을 때 각 교육청은 위기에 대비해 ‘통합재

<표 2> 시도 교육청 기금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국	678,672	610,811	3,567,909	6,794,536	5,029,221



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세수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이 기금을 대거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2025년 조성액은 7.6조 원으로 2024년 12.6조 원보다 39.4%가 감소했다.

기금 조성액이 가장 컸던 2022년에 비해서는 64.2%가 감소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022년 1.3조 원이었던 기금 조성액이 360억 원으로 97.2%가 감소했고, 전남 교육청도 1.3조 원에서 758억 원으로 94.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언급된 인천과 전남 교육청의 경우 기금 조성액이 1천억 원 미만이 되면서 기금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표 3> 시도 교육청 연도 말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 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2년 대비 증감률
합계 (전년대비 증감율)	5,404,060 (-)	21,381,146 (295.6%)	18,807,523 (△12.0%)	12,620,665 (△32.9%)	7,648,325 (△39.4%)	△64.2%
서울	404,596	1,800,336	1,825,880	1,422,000	1,249,436	△30.6%
부산	469,175	1,644,886	1,500,455	1,306,063	1,056,232	△35.8%
대구	285,000	1,190,607	1,089,771	796,259	445,347	△62.6%
인천	494,027	1,280,098	976,284	297,519	35,975	△97.2%
광주	71,810	649,335	589,623	310,012	144,897	△77.7%
대전	152,457	751,087	594,393	330,811	147,912	△80.3%
울산	101,555	455,199	443,351	256,480	107,774	△76.3%
세종	226,684	497,995	485,237	323,609	244,318	△50.9%
경기	186,016	2,926,275	2,381,878	1,430,828	454,769	△84.5%
강원	521,504	1,571,447	1,783,498	1,638,471	1,369,595	△12.8%
충북	308,988	1,264,911	1,236,487	867,288	492,993	△61.0%
충남	278,368	1,071,337	761,535	287,930	195,904	△81.7%
전북	378,571	1,350,857	1,139,688	696,463	318,610	△76.4%
전남	137,988	1,309,357	1,001,604	593,086	75,816	△94.2%
경북	794,772	1,442,682	1,076,915	1,014,085	847,317	△41.3%
경남	443,612	1,786,375	1,415,523	606,494	359,168	△79.9%
제주	148,937	388,362	505,401	443,267	102,262	△73.7%

자료: 각 시도별 결산서

논의의 배경에 대한 반론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반론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비용이 정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학급 수나 학교 건물 유지비,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은 그대로이며, 오히려 돌봄·복지 확대(늘봄 학교),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다문화 및 특수교육 지원 등 미래 학교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예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선부른 재정 축소는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스갯소리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예산을 줄이자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둘째, 교육청 세출예산의 경직성이다. 인건비와 학교 시설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성격상 규모를 줄이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상 의무적인 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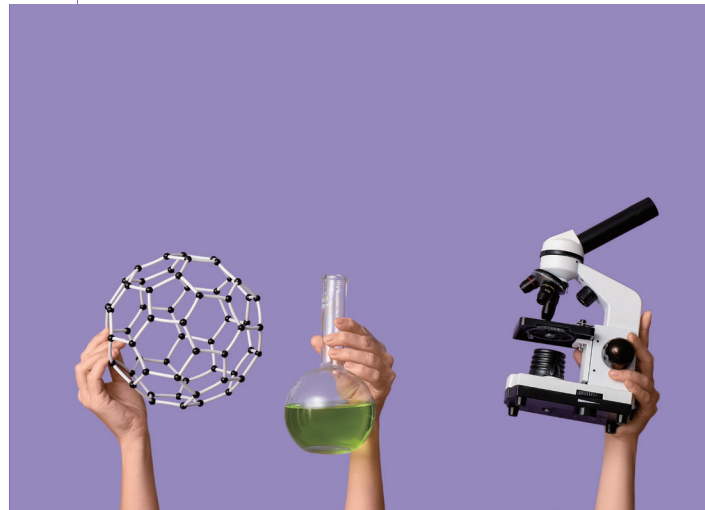
셋째, 잘못 전달된 교육청 재정의 여력이다. 2023년 국세의 대규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의 감소는 교육청은 물론 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미친 영향이 당해연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2026년 본예산 편성에까지 끼쳤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까지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일부 시도 교육청의 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합리적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제언

교육제도 합리적 개편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 가운데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학령인구 감소, 재정 여력의 충분, 예산 운용의 방만함 등 비판적인 요소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부금 개편 논의는 합리적인 자원 배분이 아닌 일방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첫째, 왜 교부금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만들어질 당시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고,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야지 몰아가듯이 하는 개편 논의는 패자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국세의 변동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재정 조정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내국세의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논란만 가중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주장대로 내국세의 변동에 따른 교부금의 변동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 측



면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바로 잡을 방안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부금 최저 조정률 제도 등 변동에도 일정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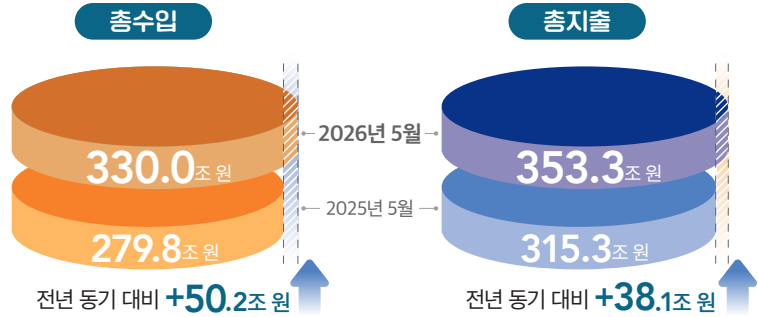
셋째, 교육의 질을 저하하지 않는 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령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적 기준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보장이나, 공무원 인건비의 적정 편성 등 교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예산의 최저선을 제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자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오래된 성을 새롭게 꾸미는 것은, 교육계 당사자는 물론 이를 새롭게 하려는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감정이 앞선 주장보다는 합리적인 논거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재원의 재배분은 시기별, 시대별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적 결정이다. 정책적 결정은 당사자는 물론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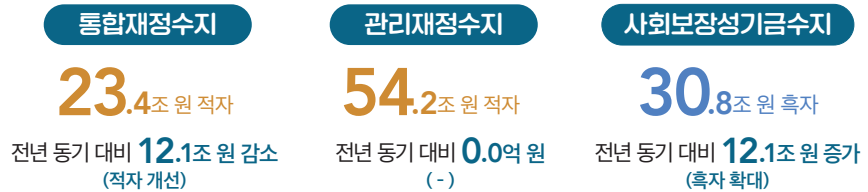
재정동향

2026년 「월간 재정동향」 7월호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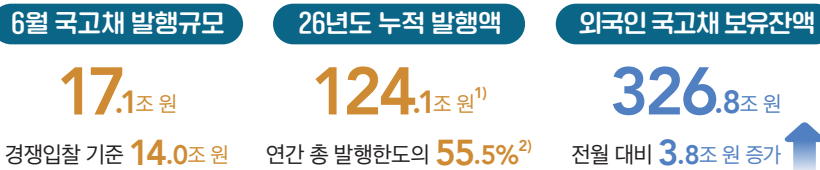
-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국가채무



- 주 1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5월 말 잠정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구성항목별 수치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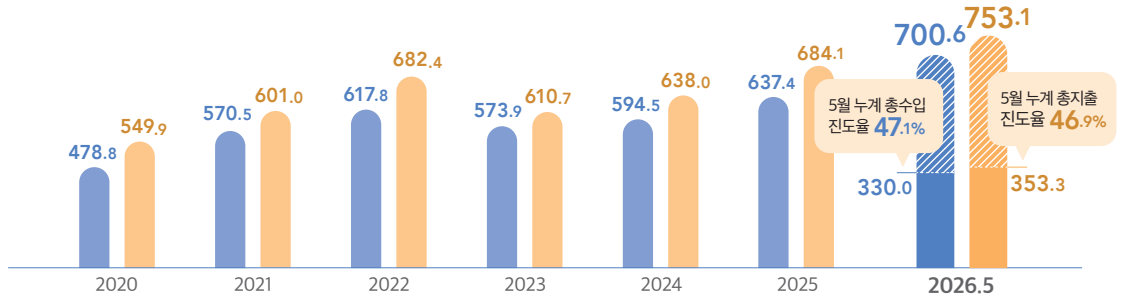
국고채



- 주 1 개인투자용 국채 1.0조 원 포함시 125.1조 원
 2 2026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한도액 225.7조 원 중 개인투자용 국채 2.0조 원 제외 기준
 3 국고채 항목은 7월호 수록 기준상 2026년 6월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 총수입 ●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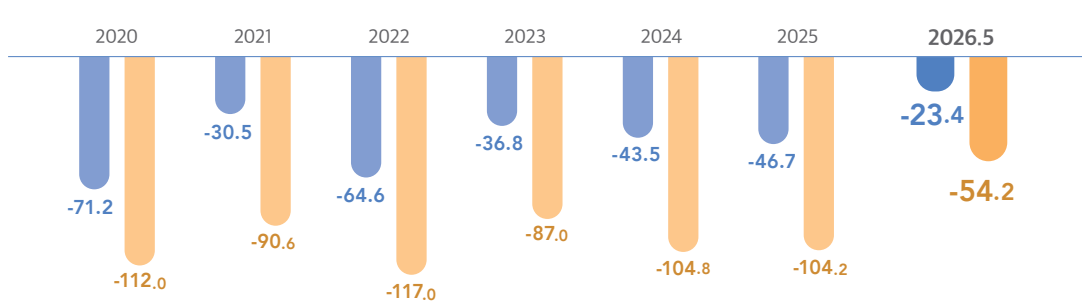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5월 말 잠정 기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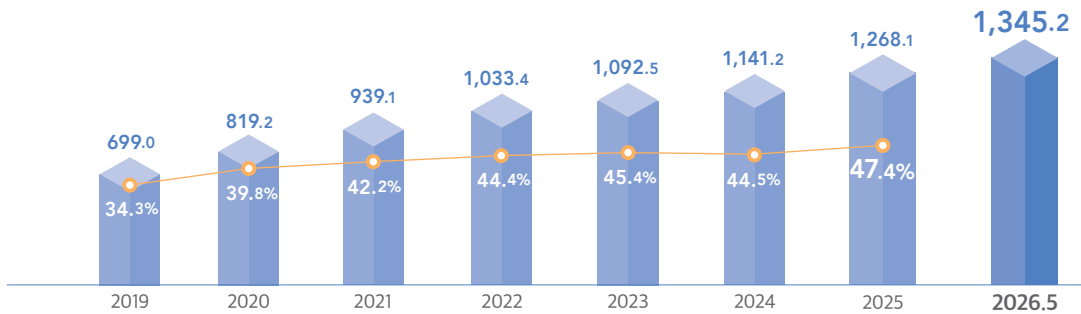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2025년까지는 결산, 2026년은 5월 말 잠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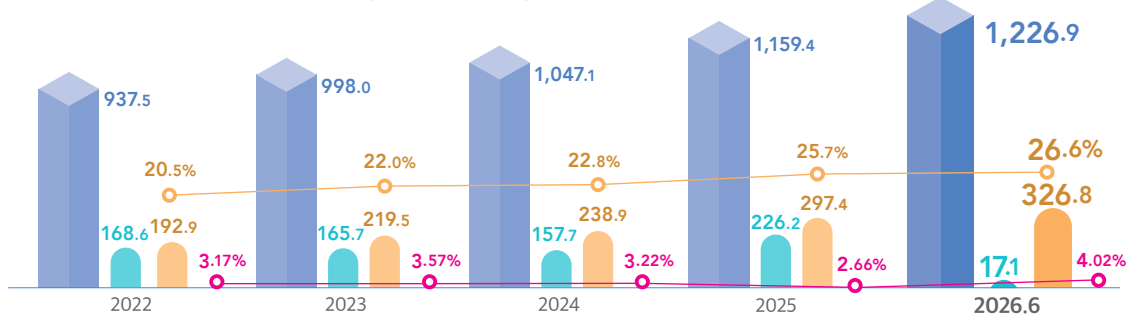
● 중앙정부 채무 ● GDP 대비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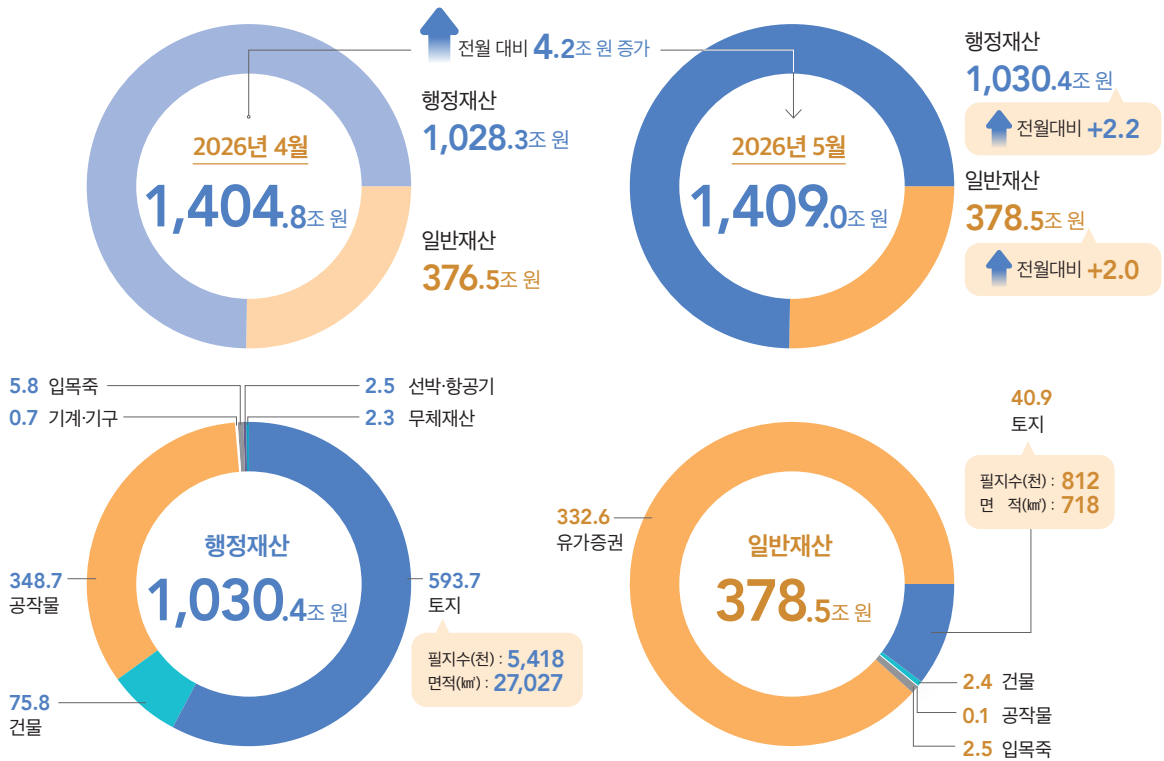
● 발행잔액 ● 발행액 ● 평균조달금리 ● 외국인 보유잔액 ● 외국인 보유비중

(단위: 조 원, %)



국유재산

국유재산 현황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국유재산 수입



주 1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임목죽, 무형자산,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 양곡, 원자재, 유동자산 등 매각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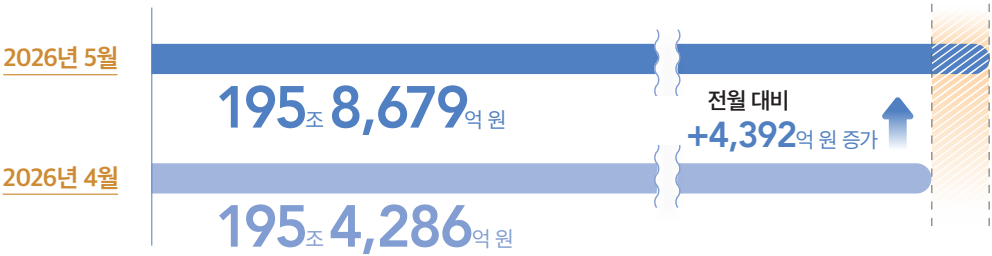
3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

4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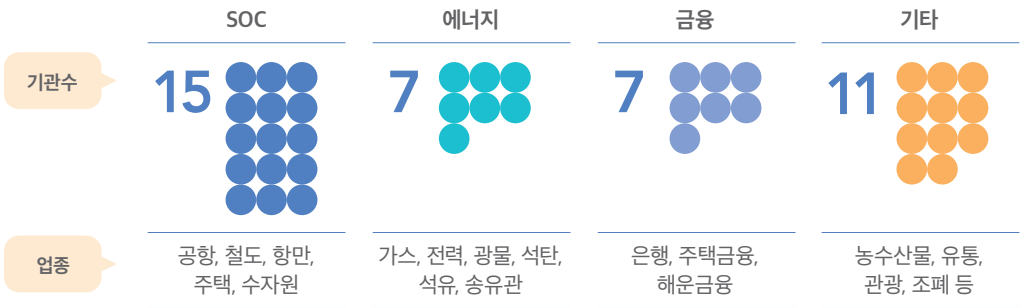
정부출자

정부출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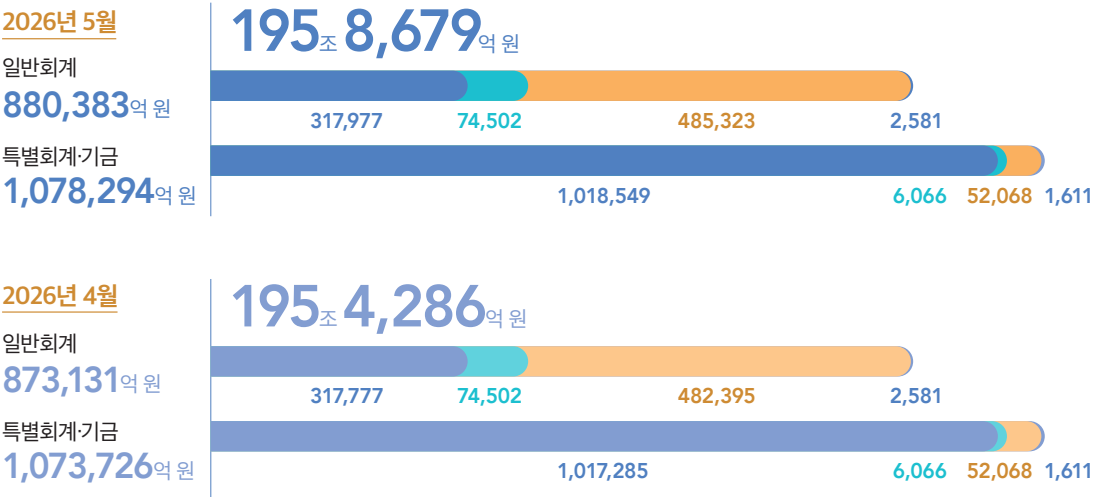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 수행 40개 기관 (단위: 개)



출자금 세부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 외 (단위: 억 원)



자료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7월호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성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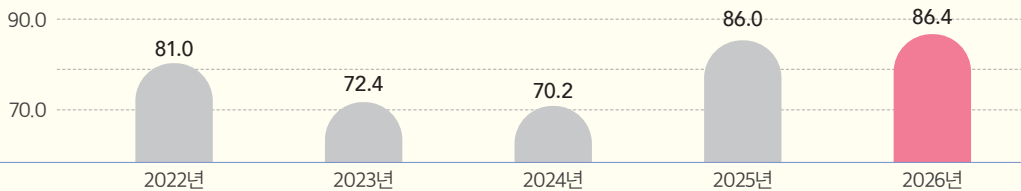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임무: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자치·균형발전 촉진, 국민생명·안전 보호

비전: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정부 구현

총지출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24년까지 결산, 2025~2026년은 본예산 기준

총지출 86.4조 원 중 성과관리대상 11.9조 원(13.7%)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일 잘하고 소통하는 국민 모두의 AI민주정부를 구현한다	12,580	10.6%	2
전략목표 II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63,288	53.3%	6
전략목표 III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14,367	12.1%	2
전략목표 IV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3,149	2.7%	3
전략목표 V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12,706	10.7%	2
전략목표 VI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	12,553	10.6%	2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행정안전부

대표 성과지표

부처의 핵심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성과지표

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정의

국민 전반의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 현황과 인식 정도,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승인통계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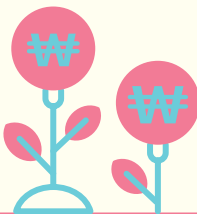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 전반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한 지표로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전략 수립 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89.6	91.2	90.7	91.6	92.4
실적	92.2	90.6	92.0	94.5	-

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건전성 유지



정의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의 통합재정규모 대비 비율(결산기준)로, 지자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을 측정하는 지표

선정 사유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기초를 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2.0	2.0	2.0	2.0	2.0
실적	6.8	-2.2	-3.2	-	-

주 2025년 실적치는 부처에서 2026년 10월 말 집계 예정

3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율



정의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지표

선정 사유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입은 지역사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을 강화함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100.0	80.0	85.0	85.0	85.0
실적	신규	85.0	87.9	85.5	-

주 2023년부터 지표명 및 측정산식 변경

행정안전부

우수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소개

*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선정사유, 개선방향 및 환류계획을 분석하여 성과목표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1 안전관리

프로그램 목표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선정 사유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프로그램 목표에 이바지하였으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 부처 비전과 부합되는 산불대응을 비롯한 안전 확보 노력으로 국민적 호응이 높음

주요 추진 전략

재난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비·대응
체계 강화

수요자 기대를
반영한 실질적 피해
지원기능 강화

사회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프로그램 예산규모 (2026년 예산)	성과지표	2025년 목표치	2025년 실적치	달성률
11,688억 원	집중안전점검 보수보강 개선율	58.0%	69.4%	1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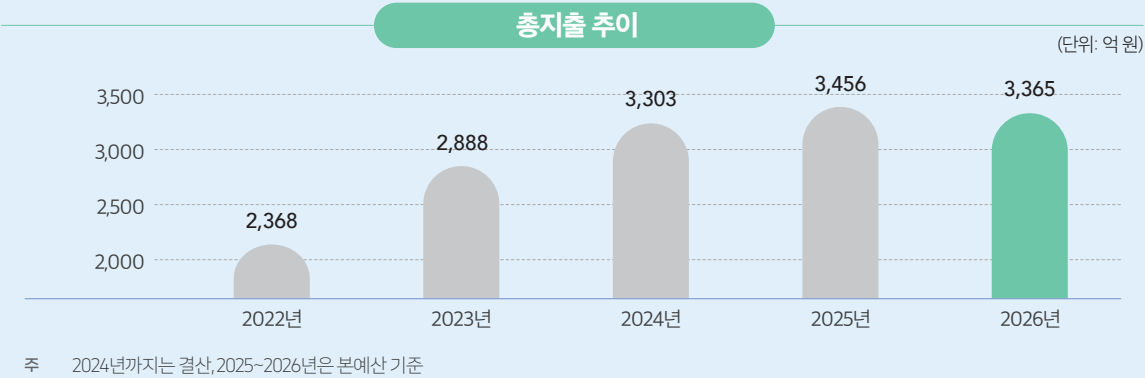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소방청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비전: 생명 존중, 국민안전 최우선



총지출 3,365억 원 중 성과관리대상 2,388억 원(71.0%)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단위: 억 원, 개)

구분	내용	2026년 예산	비중	성과 지표수
전략목표 I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	238,799	100.0%	1

주 비중은 해당 관서의 2026년 총지출 성과관리 대상 규모 중 각 전략목표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26년도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지표 성격

전략목표 1

프로그램 목표 1

성과지표 수 1

투입 0

과정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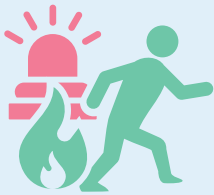
산출 0

결과 1

소방청

대표 성과지표

1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정의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상 총 요구조사 수 대비 인명구조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선정 사유

소방청이 고유의 임무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척도임

지표 추이

(단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99.1	99.0	99.2	99.0	99.3
실적	98.9	99.1	98.9	99.2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제도란?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조직 관리에 환류하는 활동입니다.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는 전략적 관점에서 수행하며 임무-전략-성과목표-성과지표로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등의 자원 활용을 체계화합니다.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목적은 기관의 재정운용에 데이터와 증거를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향상하고, 결과 공개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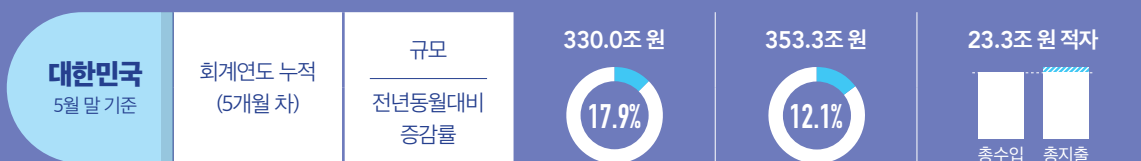


출처: 열린재정, 국가재정 > 성과관리 > 성과관리제도 소개

주요국 월간재정 통계



자료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May 2026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May 2026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2026년 4월, 일반회계)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mai 2026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May 2026



자료 한국) 기획예산처, 「월간 재정동향」 2026.7.

해외재정동향 (7월)

주요국 이슈

01 미국

- 트럼프행정부,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 예산안 제출
- 미국 국채시장의 구조적 불안 우려 지속
- 연방정부 예산으로 아동 자산형성 지원 본격화

04 영국

- 영국, 2026년 1분기 경기 반등에 성공했으나, 가계 재정 압박 지속
- 영국,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고강도 재정 긴축 권고

02 독일

- 메르츠 연립정부, 만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과감한 연금 개혁안 합의
- 독일 정부, 만성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개혁안 및 2027년 확장 예산안 전격 합의

05 일본

-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

03 프랑스

- 프랑스 국가부채 확대 우려 속 지출 감축·연금개혁 필요성 제기
- 프랑스, 방위비 확대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 가중
- 프랑스,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에 따른 추가 지출 절감 및 국가부채 확대 우려

06 중국

- 중국 재정부, 2026년 1~5월 재정수지 발표
- 중국 인민은행,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및 재정 정책과의 조율 강조

국제기구

01 OECD

- OECD, 2026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통계 (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6) 보고서 발표
-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발표

02 IMF

- 국제통화기금, 전쟁과 기술의 교차점에 놓인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주요국
동향6.23. | 트럼프행정부,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안 제출¹⁾

- 트럼프행정부는 대이란 군사작전(Operation Epic Fury)을 위한 군사비용과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안을 의회 제출
 - 이번 추경안의 대부분인 671억 달러가 탄약 및 무기조달(210억 달러), 군사작전 비용(173억 달러) 등 중동 지역 군사비용과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국방비로 편성
 - 중앙아프리카 에볼라 방역(14억 달러), 미국 농업지원(111억 달러) 등 국방 외 예산도 일부 포함
- 전문가들은 이번 긴급 예산안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평가
 - 공화당 대부분은 찬성 입장이지만, 민주당(패티 머레이 상원의원 등)은 2027년 회계연도에 요청한 국방비가 이미 1.5조 달러로 사상 최대인 점을 지적하며 추가 지출에 대해 강력히 반대

6.24. | 미국 국채시장의 구조적 불안 우려²⁾

-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최근 대규모 재정적자와 수요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
 - 2026년 6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0년물 국채의 발행금리 또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차입비용 부담이 증가
 - 과거에는 중국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에 적극 투자하며 국채 수요를 뒷받침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주요 투자자의 수요 감소로 인해 글로벌 저축 과잉(Global Saving Glut)에서 글로벌 채권 과잉(Global Bond Glut)으로 국면 전환
 - 중앙은행·연기금 등 장기투자자 중심이던 시장에서 헤지펀드사 등 단기투자자의 영향이 확대된 것도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평가
- 주요 외신인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국채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
 -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추진 중인 국채거래의 중앙청산(Central Clearing) 의무화는 거래상대방 위험을 축소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여 국채시장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의 자본 규제를 일부 완화할 경우 은행권의 국채 보유 여력이 확대되어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가능성
 - 미국 단기국채를 준비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역시 국채 수요 확대에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규제를 동반한 제도화 검토

1) <https://breakingdefense.com/2026/06/white-house-sends-87-6b-supplemental-to-congress-with-67b-for-defense/>

2) <https://www.ft.com/content/fd5b3c1e-b5b2-41d2-839f-c437f5f40232?syn-25a6b1a6=1>

- 한편, 신임 연준의장인 케빈 워시는 상대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성향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연준의 긴급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등과 같은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

7.4. | 연방정부 예산으로 아동 자산형성 지원 본격화^{3) 4)}

-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신규 재정사업 중 하나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본격 시행
 - 트럼프 계좌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의 일시금(Seed Money)을 최초 적립해 주고, 이후 아동이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족·친자·고용주 등이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
 - 개설된 계좌는 대형 자산운용사 운용을 통해 S&P500 등과 같은 저비용 ETF에 투자
 - 계좌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전 인출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도 부과 이연
- 정부는 트럼프 계좌를 통해 미국 아이들에게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금성 지원을 통해 불평등 격차도 축소할 계획
 - 다만 외신과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의 현금성 지원책들이 빈곤층을 돕는 데 실패한 사례가 많고, 오히려 추가 적립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6.28. | 메르츠 연립정부, 만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과감한 연금 개혁안 합의⁵⁾

-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의 연립정부는 내분과 경기 정체를 딛고 복지 재정 압박을 완화할 강력한 종합 연금 개혁안을 도출함
 - 이번 조치는 국방 및 투자 부문의 '채무 준칙(Debt Brake)' 완화에 이은 메르츠 정부의 가장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 평가받음

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554>

4)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6/07/11/heres-why-new-trump-accounts-wont-make-your-children-rich/>

5) <https://www.ft.com/content/5f8f0047-3264-4742-be44-2af5812e449a?syn-25a6b1a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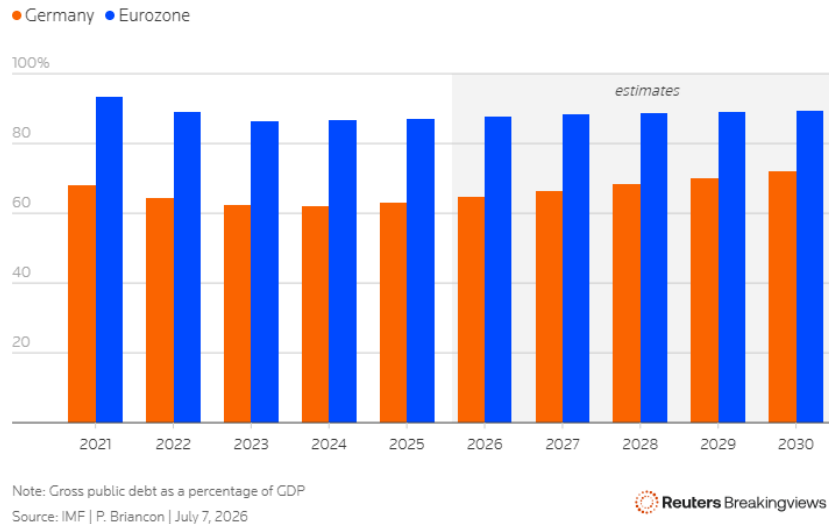
- 근로자 세전 소득의 0.5%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2%로 확대되는 자본시장 투자형 중앙 공적 연금 펀드 조성
 - 기금 적립 비용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50:50으로 동일하게 분담
 - 연간 약 3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어 현금 위주였던 독일 저축 문화에 주식 투자 문화를 이식하고 대규모 투자 자본 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기존 법정 최소 은퇴 연령인 67세를 기대수명 증가 추이에 맞춰 자동 상향 조정
 - 법정 은퇴 연령이 2041년에는 67.5세, 2091년에는 70세가 될 것으로 예상
 - 45년 동안 연금 기여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주어지던 조기 퇴직 권한을 제한하여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함
 - * 2036년까지 1,65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반면, 신규 유입 경제활동인구는 1,250만 명에 불과
- 2024년 기준 전체 연방 예산의 25%를 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 중이며, 방지할 경우 20년 내 50%까지 폭증할 우려가 있어 이번 급여세 인상 및 보조금 통제 장치가 필수적
 -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으로 고용주의 사회보장 분담금이 증가하여 메르츠 총리의 부담 상한 공약과 배치되고, 경기 침체 속 기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지적함
 -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33개 과제가 담긴 복지국가 전반의 구조 개혁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할 필요성 제기

7.8. | 독일 정부, 만성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개혁안 및 2027년 확장 예산안 전격 합의⁶⁾

- 메르츠 총리와 연립정부는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본격적인 첫 종합 경제 개혁 계획에 합의함
 -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경제분석가들은 이번 개혁안과 예산안이 당장 올해부터 독일의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를 끌어올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예산 조달을 위해 2,000억 유로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며 오랜 건전재정 기조를 철회*
 - * 연방 적자 폭을 GDP의 0.35%로 규제하던 헌법상 채무 준칙을 철폐하여 대규모 확장 재정의 발판을 마련
- 대규모 국채 발행 확대에도 독일의 내년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70% 미만을 유지하여 유로존 평균인 88%보다 양호함
 - 내년도 핵심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3% 급증한 1,090억 유로로 확정
 -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 기존 '인프라·기후중립 특별기금(Sondervermögen für Infrastruktur und Klimaneutralität, SVIK)'에서 550억 유로를 추가로 조달하여 투입함
 - 법정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 적립식 국가 연금 펀드를 신설하여 재정의 지속성 확보
 - 매년 1,500억 유로의 경제 손실을 초과하는 관료주의 해소를 위해 모든 종이 행정 서식을 이메일 등 디지털로 전면 대체
-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소비 진작을 위해 연간 100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
 - 부족한 재원은 연 소득 28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5%에서 47%로 상향하는 타깃 증세로 충당

6) <https://www.breakingviews.com/columns/considered-view/germany-has-an-economic-plan-last-2026-07-08/>

<그림 1> 독일과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공공 부채 비교



6.25./6.30. | 프랑스 국가부채 확대 우려 속 지출 감축·연금개혁 필요성 제기

- 프랑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국가부채와 이자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 신뢰와 정부의 재정정책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⁷⁾
 -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2026년 중 1,600억 유로 이상 증가하여 3조 6천억 유로, 즉 GDP 대비 약 118.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신규 국채의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2026년 약 774억 유로로 증가할 전망이며, 회계감사원은 정부의 재정적자 목표인 GDP 대비 5.0% 달성도 불확실하다고 평가
- OECD는 국가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 감축과 중단된 연금개혁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권고⁸⁾
 - 프랑스의 2026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5%, 국가부채는 약 1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누적 3%p 규모의 재정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2023년 연금개혁을 재개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직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할 것을 제언

7)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frances-rising-debt-burden-threatens-market-confidence-audit-office-says-2026-06-25/>

8) <https://www.reuters.com/world/france-faces-debt-drift-without-spending-cuts-pension-reform-oecd-says-2026-06-30/>

7.6. | 프랑스, 방위비 확대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 가중⁹⁾

- 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방위·안보 관련 지출을 GDP 대비 5%로 확대하기로 합의
 - 핵심 군사비를 GDP 대비 3.5%, 안보 관련 지출을 1.5%까지 확대할 계획
 - 유럽 NATO 회원국과 캐나다는 2025년 방위비를 전년보다 실질 기준 900억 달러 확대했으나, 국가별 재정 여건에 따라 증액 속도에는 차이 발생
 - 독일과 북유럽·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 증액에 나선 반면, 프랑스·영국·이탈리아는 자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로 지목
-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약 2%인 방위비를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
 - 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핵심 군사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하기로 합의
 - 프랑스는 방위비 확대와 유로존 재정규칙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재정적자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

7.7. | 프랑스,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에 따른 추가 지출 절감 및 국가부채 확대 우려

- 프랑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을 전망을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재정적자 목표 달성을 위해 3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출 절감을 추진¹⁰⁾
 - 연초 1.0%였던 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0.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특별법 적용 등에 따른 예상보다 부진한 연초 경제 여건과 국제정세의 영향을 반영하여 다시 0.7%로 조정
 - 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2025년 GDP 대비 5.1%였던 재정적자를 2026년 5.0%로 낮추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정부는 9월까지 국가 지출에서 20억 유로, 사회보장 지출에서 10억 유로 등 총 30억 유로를 추가로 절감할 계획
- * 지방정부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20억 유로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지방자치 원칙상 연중 추가 절감을 강제할 수 없어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
- 정부의 평균 차입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이른바 ‘눈덩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¹¹⁾
 -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2026년 1분기 3조 5천억 유로를 넘어 GDP 대비 117.5%에 도달
 -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2025년 660억 유로에서 2029년 약 1,000억 유로로 증가하여 교육·국방 예산을 넘어 정부의 주요 지출항목으로 부상할 가능성
 - OECD는 별도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국가부채가 2050년 GDP 대비 203%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

9)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nato-defence-push-already-strains-europes-budgets-2026-07-06/>

10)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6/07/07/finances-publiques-la-perspective-d-une-baisse-du-deficit-s-eloigne-de-nouvelles-economies-decidees_6721523_823448.html

11) <https://www.reuters.com/business/frances-debt-burden-risk-snowballing-ahead-2027-election-2026-07-07/>



6.30. | 영국, 2026년 1분기 경기 반등에 성공했으나, 가계 재정 압박 지속¹²⁾

- 영국 연방통계청(ONS),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6% 확정 발표하며 경기 회복세 확인
 - ONS는 2026년 1분기(1~3월) GDP 성장률 확정치가 지난 5월에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전기 대비 0.6%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로이터(Reuters)가 집계한 경제 전문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치로, 2025년 4분기(0.2%) 대비 한층 강화된 성장 탄력을 입증함
 -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추정치(1.1%)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나, 1인당 산출량(GDP per capita)은 전년 대비 0.7% 증가함
-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계절 조정 왜곡 우려도 공존
 - 컴퓨터 프로그래밍, 도소매업, 광고업 등의 호조에 힘입어 서비스업 출하량이 0.8%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
 - 제조업 등 생산 부문은 0.2%, 건설업은 0.4% 성장
 - 영국 경제가 3년 연속으로 1분기에만 유독 강한 성장세를 반복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ONS의 계절 조정 프로세스 오류 가능성을 제기함
 - 이에 ONS는 자체 검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왜곡은 없었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해명
- 이란 분쟁의 충격에 앞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선제적으로 감소
 - 노동당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real household disposable income)'은 1분기에 오히려 0.8% 감소세로 돌아서며 민간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악화됨
 - 가계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1분기 가계 저축률은 전기 대비 0.7%p 하락한 8.9%를 기록해 저축 여력이 크게 위축됨
 - 이러한 가계 경제 둔화 조짐은 거대한 대외 악재인 미국-이란 간의 중동 분쟁 여파가 영국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음
- 차기 정부의 험난한 재정 환경과 통화 긴축 지속
 - 키어 스타머(Keir Starmer)의 뒤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앤디 번햄(Andy Burham)은 4월 GDP의 일시적 감소(-0.1%)와 비즈니스 설비 투자 위축 등이 겹치며 험난한 경제 여건에 놓임
 - 경제 컨설팅 기관들은 가계 소비 위축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더라도 단기적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
 - 영란은행(BoE)이 6월 기준금리를 3.75%로 동결한 가운데, 시장 투자자들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금리가 2027년 2월 내 0.25%p 인상될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함

12) <https://www.reuters.com/world/uk/uk-economy-grew-by-06-start-2026-06-30/>

7.7. | 영국,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고강도 재정 긴축 권고¹³⁾

- 영국 예산책임청(OBR), 국가부채 폭발적 증가 경고 및 대규모 증세·지출 감축 권고
 - 독립 재정 감시기구인 예산책임청(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은 연례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를 통해 영국의 국가부채가 사실상 모든 시나리오에서 '지속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경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
 - OBR은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NHS)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공공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만성 문제로 지목함
- 부채가 위험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2030년대 초까지 영국 전체 교육 예산(또는 국내 법인세 수입 총액)과 맞먹는 규모의 추가 증세나 과감한 지출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분석
 - 현재 노동당 정부가 수립한 기존 예산 계획을 차질없이 100% 이행하더라도, 장기적이지나 부채 상승세를 완전히 저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이 드러남
 - 이번 결과는 차기 총리 후보인 앤디 번햄 행정부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전망
 - 번햄 후보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s)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로 인해 자신의 주요 공약인 공공 지출 확대(Spending Spree)를 실현할 재정적 여유가 거의 남지 않게 됨
- OBR은 재정 건전화 조치를 미룰수록 구조조정의 비용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경고
 - 만약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50년대까지 개혁을 연기할 경우, 전체 보건 예산에 육박하는 GDP의 8% 수준의 재정 수지 개선을 단행해야 하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음
 - 진보 성향의 공공정책연구소(Th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는 현재의 재정 준칙이 기후 변화나 고령화 대응에 필요한 장기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유연한 재정 프레임워크로의 재정 준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함
 - OBR은 번햄 후보가 기대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생산성 회복'이 달성될 경우, 2070년대 중반 국가 부채 비율을 기본 시나리오(GDP 대비 약 300%)보다 120%p 이상 낮출 수 있으며 필요한 긴축 규모도 GDP의 1.8%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임



13) <https://www.reuters.com/business/bank-england-forecast-scenarios-april-2026-2026-04-30/>



6.16. | 중앙은행,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¹⁴⁾

- 중앙은행은 6월 통화정책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로 결정함
 -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금리와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각각 1.0%, 1.25%로 조정
 - 이번 결정은 정책위원회의 7대 1 찬성으로 의결
 - *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으며, 1명의 반대 의견으로는 중동 상황의 영향과 관련하여 생산과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물가 상승 위험보다 크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일본 경제는 중동 지역의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부분적으로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함
 - 원유 가격 상승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높은 기업 수익과 고용·소득 여건의 개선 등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뒷받침
 -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이 계속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의존이 높은 원자재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은 이전보다 감소
- 물가 측면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최근 2%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함
 - 한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기업 간 거래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전가 현상이 소비자 가격으로 확산할 가능성 존재
 - 또한,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향후 중앙은행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정책금리 조정 이후에도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앞으로도 경제 활동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경제 활동, 물가 및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완화 폭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중동 지역 정세가 일본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앙은행의 경제·물가 전망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과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
 -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

14) https://www.boj.or.jp/en/mopo/mpmdeci/mpr_2026/k26061



6.22. | 중국 재정부, 2026년 1~5월 재정수지 발표¹⁵⁾

- 2026년 중국 1~5월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10조 4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 일반 공공예산은 세금 등으로 조달해 교육, 복지, 보건 등 정부의 기본 지출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 세입은 8조 2,617억 위안으로 4.4%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1조 7,848억 위안으로 2.2%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4조 3,850억 위안으로 5.7% 증가했고, 지방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5조 6,615억 위안으로 2.7% 증가
- 같은 기간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11조 3,877억 위안으로 0.8% 증가했으며, 사회보장·고용 지출과 보건 지출은 각각 6.3%, 11.3%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조 6,815억 위안으로 6.5% 증가
 - 지방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9조 7,062억 위안으로 0.1% 감소
 - 주요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고용 지출은 2조 1,324억 위안으로 6.3% 증가했고, 보건 지출은 9,898억 위안으로 11.3% 증가
- 2026년 1~5월 정부성기금예산 수입은 1조 2,51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
 - 정부성기금예산은 토지매각수입 등 특정 재원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나 도시개발 등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중국 지방정부 재정과 밀접하게 연결
 - 중앙 정부성기금예산 수입은 2,042억 위안으로 10.5% 증가, 지방 정부성기금예산 본급 수입은 1조 476억 위안으로 23.2% 감소

7.8. | 중국 인민은행,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및 재정정책과의 조율 강조^{16) 17)}

-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2분기 회의 이후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지원 확대 방침을 제시
 -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은 강하고 수요는 약한 불균형, 구조적 분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은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통화정책·재정정책 간 조율 강화를 강조
- 중국 인민은행은 2025년 5월 이후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6월 말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
 - 2026년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4.5~5.0% 수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2026년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5.0%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

15) https://gks.mof.gov.cn/tongjishuju/202606/t20260622_3992033.htm

16) <https://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2026070818273311767/index.html>

1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s-central-bank-pledges-maintain-accommodative-policy-amid-weak-demand-2026-07-08/>

국제기구
동향

6.30. | OECD, 2026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통계(REVENUE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2026) 보고서 발표¹⁸⁾

- OECD는 202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GDP 대비 평균 조세수입 비율이 19.7%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고 발표
 - 이는 OECD 평균(34.1%)보다는 낮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19.3%)을 상회
 - 다만 2024년 자료가 확인되는 36개국 중 20개국은 조세수입 비율이 하락하고, 16개국은 상승하는 등 국가별 흐름은 상이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입 구조는 재화·서비스세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 38개 조사대상국 중 26개국에서 재화·서비스세가 가장 큰 세입원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목의 중요성도 확대되는 추세
 - OECD는 비공식 부문과 과세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세원 관리가 국내재원 동원의 주요 과제라고 제시
- 한국의 경우 2024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25.3%로 아시아·태평양 평균을 상회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하락
 - 한국의 조세수입 비율은 2023년 26.9%에서 2024년 25.3%로 1.5%p 하락했으며, 이는 주로 법인소득세 감소에 기인
 - 세입 구조 측면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조세수입의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개인소득세가 20.1%로 뒤를 이음

7.2. |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발표¹⁹⁾

- OECD는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재정·통화정책 지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 매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별 검토보고서 발표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5년 1.0%에서 2026년 2.6%로 높아진 뒤, 2027년 1.9%로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소비 회복에는 재정지원이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건·돌봄 지출 증가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18) <https://doi.org/10.1787/065aa566-en>

19) <https://doi.org/10.1787/6b87f585-en>

-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준칙 등 중기 재정운용 틀을 강화하고, 추가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
 - 세입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 교정세, 배출권 거래,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성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법인세 구조 단순화,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과세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성장친화적 세제개편 과제로 언급
- OECD는 지역 간 격차 완화와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도 한국의 주요 과제로 제시
 -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거점지역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
 -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대학 강화, 주거정책 개선 등을 위해 중앙부처 간,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
 -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7.8. | 국제통화기금, 전쟁과 기술의 교차점에 놓인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²⁰⁾

※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 2회 발간되며, 중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짐

- 기술 분야의 성장세가 전쟁의 여파를 상쇄하면서 성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별로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6년 3.0%, 2027년 3.4%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2026년 4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와 대체로 동일한 수준
 - 경제전망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에너지 수출국과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에 긴밀하게 통합된 경제권(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수요를 의존하는 국가 포함)은 전망이 상향 조정된 반면, 인공지능 기반 활동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원자재 수입국은 하향 조정
- 세계 물가상승률은 꾸준한 하락세를 멈추고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함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5년 4.1%에서 2026년 4.7%로 상승한 후 2027년에는 3.9%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 2026년 상승은 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에 기인
 - 물가상승률 또한 국가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환율 전가 효과, 서비스 물가 상승 지속, 노동시장 상황, 국가별 특수 요인의 중요성 증대 등의 차이를 반영
 - 근원 물가상승률은 주요 경제국에서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 영국은 2027년 중반, 일본과 미국은 2027년 말, 유로 지역은 2028년에야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위험 요인은 지난 4월 발표보다 균형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이 큼
 -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짐
 - 또한, 인공지능 관련 자본 지출이 예외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거나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되어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부진할 수도 있음
- 전쟁은 인플레이션 억제, 경제 활동 지원, 취약 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를 제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현재 충격에 대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동향, 재정 여력, 금융 취약성 등의 차이를 반영한 각국의 맞춤형 대응책과 더불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표 1〉 국가 그룹별 세계 경제 전망 비교

(단위: %)

구분	'26년 7월 전망		'26년 4월 전망 차이	
	2026	2027	2026	2027
세계 경제 성장률(WORLD OUTPUT)	3.0	3.4	-0.1	0.2
선진국	1.7	1.8	-0.1	0.1
신흥·개발도상국	3.8	4.5	-0.1	0.3
세계 소비자물가(CONSUMER PRICES)	4.7	3.9	0.3	0.2
선진국	3.0	2.4	0.2	0.2
신흥·개발도상국	5.8	4.8	0.3	0.2



20)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6/update/july/english/text.pdf>

07

2026 July

| 재정 |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 개최 (기획예산처 6.24.)

-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6월 24일(수)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일반국민·민간전문가·관계부처·지방정부 등 80여 명과 함께 「2045년, 미래 미리보기」라는 주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타운홀 미팅을 개최
- 이번 타운홀 미팅은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와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한 공간에서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논의한다는 점에 서 차별화
 - ① 과거 8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최근 현안을 나타내는 키워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2045년 새롭게 등장할 단어와 사라지기를 희망하는 단어를 국민이 제시
 - ② 미래 성장동력, 미래 공동체의 모습 등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국민 토론
 - ③ 정책 밸런스 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미래상 표현 및 공유
- 기획예산처는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설계 방식을 정착시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 논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정부,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기획예산처 7.13.)

- 정부는 7월 13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 부처·여당 주요 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 인사 등 130여 명과 함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7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자원방안'에 대해 논의
 - ①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전망하고,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제시(①국가성장패러다임 전환, ②지방주도 성장, ③양극화 구조 개선, ④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 ②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성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자원방안 논의(①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 및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 육성, ②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승리 및 AI 로봇 시장 초기 선점 지원, ③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④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전략)

- ③ 담대한 투자에 따른 성장의 온기를 국민 모두에게 확산하는 방안 논의(①청년들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 ②'대든든' 핵심 과제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 추진)
-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과감한 혁신과 담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

| 경제 |



재정경제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 보고회 개최 (재정경제부 7.3.)

- 정부는 7월 3일(금)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중앙·지방정부, 산업계, 유관기관 등 200여 명과 함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
-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총 3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정부의 비전을 제시
 - ① 한화그룹 약 55조 원(위성, 발사체, 우주·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대자동차그룹 약 42조 원(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미래 핵심부품 제조 클러스터, 제조 AI, 미래 항공·우주), 삼성 약 60조 원(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 차세대 배터리 양산 라인), SK그룹 약 140조 원(2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영남권 투자계획 발표
 - ② 정부는 지방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들의 대규모 영남권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영남권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거점 전국 확산, 영남권 2GW AI 데이터 센터 건설, '첨단 로봇 초혁신 벨트' 집중 육성, 세제 지원 대폭 강화 및 대규모 시설·R&D 투자 재정 지원)
 - ③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발표(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조기 발사,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우주항공 산업 육성)
- 이어서 체결된 투자협약에 따라 각 기업은 영남권에 투자를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

1월

| 재정 |

- 2027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경제 |

- 202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 재정 |

- 2025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5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재정 |

-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예산처→각 중앙관서)
-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무회의 의결

| 경제 |

-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3월

4월

| 재정 |

-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확정
- 2025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예산처→감사원)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 재정 |

- 2027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예산처)
- 2025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5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 재정 |

- 2025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경제 |

-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 202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국제 |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7월

| 재정 |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경제 |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 재정 |

-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 재정 |

- 2027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9월

10월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국제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 경제 |

- 국가데이터처 2026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국제 |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 재정 |

- 2027년 예산 확정

| 경제 |

- 한국은행 2026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들어가며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의 재원 조성 및 사업 운용·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대미 투자 요구와 관세 압박에 대응하여 미국이 요구한 방대한 규모의 투자 압박을 방어하면서도 국내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부펀드 방식과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독특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투자공사와 기존 정책금융기관은 투자 자금의 성격과 리스크 분담 측면에서 역할을 나누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 약정액을 수용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전용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한다. 외환보유고를 직접 헐어 현금으로 송금할 경우 발생할 외환시장 마비를 막기 위해 국부펀드의 운용 노하우

를 접목하여 민관 합동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고 통제하는 사령탑 역할을 한다. 정책금융기관은 투자공사가 주도하는 대미 투자 펀드에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거나,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반도체, 원전, 2차전지 등)에 정책 자금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재정운용기법은 처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진화해왔다.

우리나라 재정은 외국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시작해, 점차 자체 세수를 확보하고 나아가 정부의 직접 지출을 넘어 보증, 융자, 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왔다. 먼저, 미군정 및 원조 경제 시기에는 외부의 도움으로 살림살이를 꾸렸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의 혼란과 6·25 전쟁으로 인해 국내 생산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어 체계적인 세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미군정청 지원 및 이후 ICA(국제협력처) 원조, PL480(잉여농산물원조)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했

정책금융과 재정 이야기

정부 재정은 더 이상 예산을 직접 지출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정책금융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며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원조와 차관,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에서 융자·보증·펀드 투자로 이어진 변화는 국가 재정의 역할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투명한 운용과 독립적인 사업성 검토, 철저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진다. 정책금융과 재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 전략과 시장의 활력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연구·대외부총장, 행정학과 교수

다. 원조받은 물자를 국내에 팔아 마련한 ‘대충자금(Counterpart Funds)’이 당시 국가 재정 수입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고 이 자금으로 전후 복구와 시급한 국방비, 민생 안정을 충당했다.

이어, 세수확보와 일반회계 중심 시기가 이어졌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의 원조가 점차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면서, 자립 경제 구축이 시급해졌다. 1966년 국세청이 신설되면서 징세 체계가 획기적으로 정비되었고 1977년에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마련되었다. 원조 자금 대신 국민들이 낸 세금, 즉 일반회계(조세 수입)를 중심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며 도로, 항만 등 국가 기간시설(SOC)을 본격적으로 건설했다.

1980년대부터는, 정책금융과 보증·융자 지원의 확대 시기라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 육성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 늘어났으나, 정부의 일반회계 예

산만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지출하기보다, 민간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금융(Policy Finance)과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재정에서 출자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설립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유망 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보증을 서줌으로써 시중은행의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들어 펀드 및 투자 중심의 시기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지원을 넘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고도화된 살림 시기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신산업(AI, 바이오, 친환경 등) 지원 등 위험도가 높지만,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분야는 기존의 ‘융자’나 ‘보증’만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넘어, 민간 자금과 함께 지분 투자를 하는 ‘재정 펀드(모태펀드 등)’ 활

용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마중물(종잣돈)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예산을 출자하면, 민간 자금이 결합하여 대규모 '투자 펀드'를 결성한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에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Exit)한 뒤, 이를 다시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최근에는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금융 펀드'가 재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금융 제도

최근 정부재정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금을 유인하는 정책금융 및 정부펀드(융자·출자·보증 등) 형태로 연계되어 집행되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1970~1990년대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해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지원하던 시기에는 국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아가서

2005년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출범했다. 재정이 직접 투자하기보다 민간 벤처캐피탈 자금과 매칭하는 펀드 시스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0년대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성장 사다리 펀드 등 성장 단계별·산업별로 세분화된 정부 재정 지원 펀드가 급증했다. 2020년대부터는 대형 정책펀드 및 핵심산업에 집중하는 추세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으로 재정과 금융 연계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후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를 거쳐 현재는 국민성장펀드(2026년 기준 연 7조 원 규모 목표) 및 5대 중점전략분야(첨단산업, 기후위기 등) 중심의 대형 정책금융 공급 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 재정(일반회계나 기금)을 마중물로 삼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민간 자금을 결합해 조성한다. 대표 사례로 2026년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는 재정(약 4,500억 원)과 산은 자금 등을 융합해 총 7조 원



(정책성 5.6조 원, 국민참여형 6,000억 원 등) 규모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이 자금을 공급한다. 지원 규모는 2026년 기준 4대 정책금융기관의 총 공급 계획이 252조 원에 달하며, 이 중 150조 원 이상이 5대 중점분야(글로벌 탑스핀 첨단 산업,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2026년 신보 2,700억 원 공급 등)에도 재정이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형태로 연계된다. 또한, 2026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본격 가동되어 전체 기업대출 공급액 중 41.7%(약 106조 원) 이상이 지방에 배정되고 있다.

정책금융은 재정의 지렛대(Leverage)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가 100의 재정을 직접 지출하면 100의 효과만 나지만, 이를 금융과 연계해 펀드나 보증의 마중물로 쓰면 민간 자금이 매칭되어 400~500 이상의 자금 공급 효과를 유발한다. 초기 위험도가 높아 민간 금융이 꺼리는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이나 벤처·스타트업 영역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위험을 분담(후순위 투자 등)함으로써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를 이끌어낸다. 과거에는 부처별로 보조금을 쪼개어 주던 방식을 탈피하여,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산업부·과기부 등의 정책 수요를 금융 공급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재정의 금융 연계 방식은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는 직접 재정지출에 비해 국회의 통제나 투명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 펀드 손실 발생 시 최종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펀드와 금융 공급이 지속되면 민간 스스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자생적 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정권의 기조나 부처의 단기 성과에 맞춰 펀드 명칭과 중점분야가 자주 바뀌다 보니,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어렵고 유행 타기식 투자에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방식이나 보증 확대로 짜인 사업은 향후 금리 급등이나 부실률 증가 시 정부 재정에 부메랑(대위변제 부담)으로 돌아와 장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과 금융의 연계는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민간 시장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리스크관리 체계가 향후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재정의 금융 연계 사례

재정정책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Fiscal Policy)는 현대 거시경제정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할 때 보조금 대신 대출·보증·펀드 투자 등 금융 기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금융 수단을 마중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유럽연합(EU)의 ‘융커 플랜(Junker Plan)’ 및 ‘Invest EU’ 사례가 눈에 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EU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규제(마스트리히트 조약 등)로 인해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5년 융커 당시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전략투자기금(EFSI)을 창설했다. EU 재정으로 210억 유로의 보증(Risk-bearing capacity)만 제공하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총 5,000억 유로(약 25배)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냈다. 현재는 이를 계승한 ‘Invest EU’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 금융화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천문학적 인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금융 집행 기법이 숨어 있다. 미 에너지부(DOE) 산하의 대출프로그램국(LPO, Loan Programs Office)은 IRA 및 인프라법(BIL)을 통해 수 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증 및 직접 대출 권한을 부여받았다.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배터리, 수소, 원전 등)을 개발하는 기업에 정부가 직접 저리로 용자해주거나 민간 은행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직접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 경제의 발전과 특정 산업 육성, 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재원과 보증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정책금융은 한 국가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다. 한국의 정책금융은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시장의 시그널을 무시하거나 정치적 논리에 휘둘러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어두운 단면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정책금융은 시장 초기 단계의 고위험을 정부가 분담(마중물 역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점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선점한 경우다.

당시 민간 자본과 기술력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국민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특정 중화학 분야에 자금을 집중 배정했다. 1980년대 삼성의 반도체 투자 초기, 현대자동차의 고유모델 개발 등 대규모 시설 자금이 필요할 때 정책금융이 저리로 외화를 조달해 주었다. 성공 요인은 세계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국가 전략과 민간 기업의 치열한 기업가 정신이 결합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수출 산업의 뼈대를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중반 글로벌 조선 불황으로 대형 조선사들

이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은 단순 채무 유예를 넘어 선박 부문 보증(RG·선수금환급보증)을 적시에 발급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자금을 지원했다. 구조조정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LNG운반선 등)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점하며 부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2019년)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및 바이오·배터리 분야 벤처·중소기업에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했다. 민간 모태펀드 구조를 활용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미래 신산업으로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배터리와 바이오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에 실패한 정책금융 지원은 대개 정치적 압박에 밀려 상업적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했거나,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에 갇혀 한계기업의 수명을 무의미하게 연장한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실을 은폐하고 분식회계가 저질러지는 동안,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지역 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수조 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엄격한 상업적 스크리닝 없이 지원을 이어가다 밀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부실을 키웠고,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민간 매각(한화그룹)으로 일단락 되었다. 정책금융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2000년대 후반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해외 자원외교 기치 아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대출과 보증을 제공했다. 정권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부실 자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후 원자재 가격 하락과 맞물려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공중으로 분해되었고, 관련 공기업들은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빼놓을 수 없는 사례는 1990년대 중반 한보그룹이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성격의 자금이 총 5조 원 넘게 특혜 대출되기도 했다. 권력형 비리와 정경유착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정책성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결국 한보철강의 부도는 대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은행권 부실로 이어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결정적 도화선이 되었다.

이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해 보면 정책금융의 성패는 결국 상업적 타당성(Feasibility)의 독립적 심사와 정치적 논리의 차단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트럼프발 압박 대응용 한미전략투자 공사 역시, 과거 자원외교나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정치적 성과나 미국의 압박 수용에만 매몰될 경우

실패 사례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 사례처럼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정책금융기관의 간간한 심사가 결합한다면, 공급망 다변화와 미래 산업 영토 확장이라는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미래의 한국 정책금융은 정부가 직접 돈을 쥐여주는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민간 금융이 감당하지 못하는 초고위험 영역의 위험을 정교하게 짚고어 인수해 주는 위험 관리자(Risk Insurer)가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OECD (2021), The Fiscal Implications of Strategic Investment Funds.
 강동수 (2014),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KDI)
 임소영 (2014), 재정융자제도의 개선과 이차보전확대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능 공장의 시대, 데이터센터 진화에 따른 재정 정책 과제

AI FACTORY



‘저장’ 공간에서 ‘생산’ 공간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터넷 보급 이후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디지털 인프라(Infrastructure)로 자리 잡았다. 과거 데이터센터의 역할은 기업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웹 트래픽 중개, 서버의 중단 없는 가동 등 ‘데이터 저장소(Data Storage)’에 국한되었다. 정적 데이터를 보관하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는 수동적 공간에 가까웠다. 그러나 생성형 AI(Generative AI)의 등장은 데이터센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다. 현재의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보관 창고를 넘어, 데이터를 원료로 고부가가치 산출물을 창출하는 ‘지능형 제조 공장(AI Factory)’으로 진화하고 있다. 엔비디아(NVIDIA)의 최고경영자 젠슨 황(Jensen Huang)을 비롯한 글로벌 기술 리더들은 미

래 데이터센터를 토큰(Token)을 생산하는 새로운 시대의 공장으로 규정한다.¹ 원료인 데이터와 동력원인 전력을 투입하여 비즈니스에 즉시 활용 가능한 ‘지능(Intelligence)’을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제조 기지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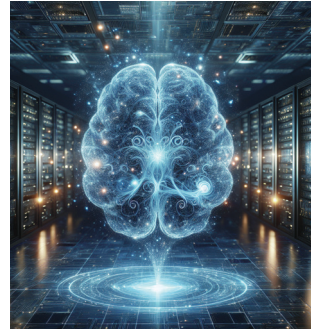
이러한 전환은 우리 재정에도 직접적인 함의를 던진다. 지능 생산 기지의 구축에는 기가와트(GW)급 전력망과 수조 원대의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며, 이는 곧 대규모 공공투자과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지능 생산 공장으로 변모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로 촉발된 물리적 인프라(Infrastructure)의 격변과 기업의 과제를 살펴본 뒤, 이를 뒷받침할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1 NVIDIA, “AI is a 5-Layer Cake”, 엔비디아 공식 블로그(2026.3). 최초 발표는 2026년 1월 세계경제포럼 연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시설을 넘어 지능을 생산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망과 컴퓨팅 자원, 첨단 반도체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효율적인 재정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AI 팩토리 시대에 필요한 재정 정책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이상현 산업연구원 A디지털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표 1> 전통적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의 핵심 패러다임 비교

구분	전통적 데이터센터(디지털 창고)	AI 팩토리(지능 제조 공장)
핵심 역할	데이터 저장·호스팅·트래픽 중개	데이터 학습 및 모델 추론, 지능 생산
아키텍처	개별 서버의 병렬적 나열독립 작동	초고속 네트워크로 묶인 단일 슈퍼컴
입·출력물	(입력) 사용자 요청 → (출력) 정적 파일	(입력) 전력+데이터 → (출력) 지능형 토큰
전력 규모	수십 MW 수준의 범용 전력망	GW 수준의 대규모 분산형 전력망

자료: 본문 내용 정리

AI 팩토리의 가동 메커니즘 :

‘5단 케이크(5-Layer Cake)’ 모델

인공지능 생태계를 고도로 연계된 단일 공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업계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제시한 ‘5단 케이크(5-Layer Cake)’ 개념을 활용한다. 이 개념은 2026년 1월 세계 경제포럼(다보스)에서 처음 제시된 뒤 엔비디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식화되었으며, 에너지를 기저 동력으로 삼아 최상단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설명한다. 데이터센터는 이 다섯 계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능을 생산하는 물리적 공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에너지(Energy)와 칩(Chips): 지능 생산의 물리적 토대
실시간으로 지능형 연산을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상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이 요구된다.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토큰)이 전력 투입과 전자의 물리적 이동을 거쳐 완성되므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는 공장 가동의 최우선 전제 조건이다. 에너지 계층 위에는 고성능 연산 가속 프로세서(GPU·NPU)가 위치한다. 이 반도체 칩은 전력을 연산 작업으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대규모 병렬처리 능력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을 결합하여 전력당 연산 성능(Performance per Watt)을 극대화하는 역량이 이 단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2) 인프라: 전통적 데이터센터에서 AI 팩토리로 진화

5단 케이크에서 인프라는 전통적 데이터센터가 AI 팩토리로 진화하는 물리적·논리적 전환점을 상징한다. 과거의 인프라는 독립된 서버들을 병렬로 나열하여 정적 데이터를 저장·인출하는 ‘디지털 창고’에 불과했다. 반면, AI 시대의 인프라는 개별 칩을 고성능 네트워킹(Network Fabric)과 초고속 인터커넥트로 묶어 단일한 거대 슈퍼컴퓨터이자 초정밀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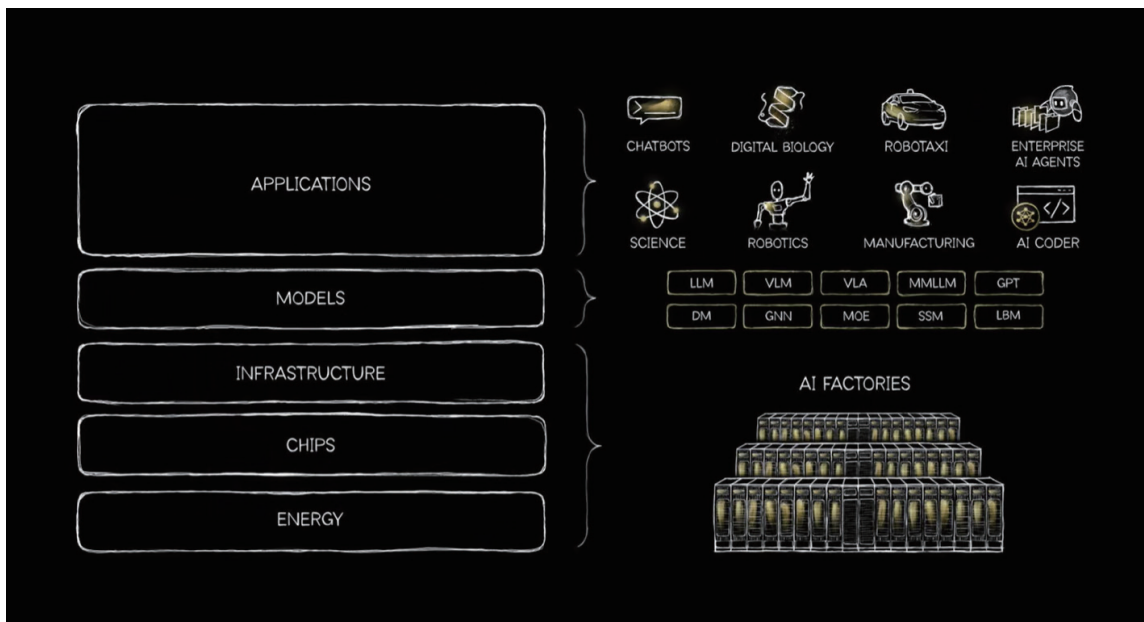
설비로 작동시킨다. 즉, 인프라 계층은 하단의 자원을 결합하여 지능을 양산하는 물리적 실체를 제공한다.

3)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범용 지능에서 경제적 가치로

통합된 하드웨어 인프라 위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고도화되는 소프트웨어 엔진이 AI 모델이다. 흔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주목받지만, 이 계층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물·화학·물리 현상과 로봇 제어를 이해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와 산업 도메인 특화 모델이 오히려 제조 현장에서 결정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후술할 우리나라의 강점과 직결된다. 최상단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산출된 지능이 의료·금융·제조 등 실제 도메인과 결합해 자본 회수와 경제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그림 1> 엔비디아의 5단 케이크(5-LAYER CAKE) 모델



자료: <https://blogs.nvidia.co.kr/en/blog/ai-5-layer-cake/>(검색일: 2026.7.15.)

인프라의 물리적 격변 :

전력·냉각·부지 그리고 하드웨어 경쟁력

데이터센터가 지능의 생산 공장으로 진화함에 따라, 하드웨어 인프라 영역에서도 전통 제조업의 공장 건설에 준하는 물리적 변화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1) 기가와트(GW)급 전력 공급의 한계와 분산화

초거대 AI 모델이 구동되는 데이터센터는 GW 단위의 전력망 구축을 요구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 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² 도심 인근 부지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데이터센터 입지는 발전 설비 인근이나 송전 인프라가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단지와의 연계, 소형 가스터빈 등 분산형 전원의 내재화도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2) 열 제어 솔루션: 액체 냉각(Liquid Cooling)의 도입

서버 랙의 전력 밀도 급상승으로 발생하는 고열의 제어는 공장 가동률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이다. 공

랭식의 한계를 넘기 위해,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직접 담그는 액침 냉각(Immersion Cooling)이나 냉각수가 칩의 바닥면을 순환하는 수랭식 공법이 보편화되고 있다.³

3) 노후 공장 부지의 전환과 재활용

물리적 입지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된다. 전통 제조업 쇠퇴로 유휴화된 철강 공장이나 화력 발전소 부지를 최첨단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대용량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 송전선로와 냉각수용 수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어, 건설 비용 절감과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4)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고효율 가속 인프라의 경쟁력

전력·냉각과 함께 AI 팩토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축은 하드웨어 자체의 효율이다.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은 곧 메모리 대역폭에 의해 제약되며, 이 병목을 해소하는 핵심 부품이 고대역폭 메모리(HBM)다. HBM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

<표 2> AI 팩토리 전환에 따른 인프라 물리적 격변과 대응 방향

격변 이슈	핵심 내용	대응방향 및 시사점
GW급 전력 공급·계통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급증, 도심 입지 곤란	발전설비 인근 분산 배치, 분산형 전원 내재화
열제어(냉각)	고밀도 랙 발열 → 공랭식 한계, 액침·수랭식 보편화	전력효율(PUE) 개선, 랙 밀도 소형화 유리
부지확보 및 전환	유휴 철강·화력부지 전환 (송전선로·수자원 기 확보)	건설비 절감, 인허가 단축의 실효적 대안
HBM·하드웨어	연산 성능의 메모리 대역폭 병목 → HBM이 핵심(우리나라 주도)	고효율 AI 가속 인프라 패키지 공급으로 도약

자료: 본문 내용 정리

2 국제에너지기구(IEA), “Energy and AI”,(2025.4)

3 MarketsandMarkets, “Data Center Liquid Cool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9”

장을 사실상 주도하는 소수 영역으로, AI 팩토리 시대에 우리가 하드웨어 계층에서 확보한 가장 강력한 교두보다. 여기에 고효율 전력 반도체, 정밀 냉각 설비, 저전력 추론 가속기까지 결합하면, 우리나라는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고효율 AI 가속 인프라’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공급자로 도약할 수 있다.

기업의 생존 체력: 데이터 보안과 산업 특화형 버티컬 AI
데이터센터의 공장화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범용 AI 모델의 활용 단계를 넘어, 기업이 자체 특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지능을 확보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데이터 보안과 지적재산권(IP) 보호

생성형 AI 도입 시 기업이 직면하는 핵심 장벽은 ‘보안’이다. 퍼블릭 AI 서비스의 경우, 민감 정보의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독립된 전용 데이터센터나 격리된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에 독자 AI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보안이 보장된 자체 인프라인 경우에만 핵심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범용 지능의 한계와 버티컬 AI에서의 우리의 강점

빅테크의 범용 AI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산업

현장 적용에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반도체 미세 공정 최적화, 조선 공정의 정밀 제어 등은 일반적 정보 학습만으로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지닌 풍부한 제조 현장 데이터와 깊이 있는 도메인 역량은 차세대 버티컬 AI(Vertical AI) 시장을 선점할 강력한 무기다.⁴ 공정 엔지니어링 지식과 설비 제어 노하우(OT)를 특화 모델에 주입하고 전용 AI 팩토리 연계할 때, 우리나라는 범용 기술의 격차를 넘어 특정 산업 영역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기업 전용 AI 인프라의 구축

자사 사업에 정확히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출물(토컨)을 얻으려면, 기업 특화 프로세스를 학습한 독자 소형언어모델(sLLM)과 이를 구동할 맞춤형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때 ‘전용 인프라’는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Sovereign AI)와는 차별화된, 기업 단위의 프라이빗 AI를 뜻한다. 독자 인프라 확보 여부는 디지털 전환기 기업의 중장기 생산성 격차를 규정하는 핵심 척도가 된다.

4) 기업이 직면한 그림자: 하단 스택 종속과 과투자 리스크

다만 이러한 전환에는 하방 위험이 병존한다.

첫째, 5단 케이크의 하단(칩·인프라)이 특정 해외 플랫폼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 계층으

<표 3> 기업 특화 AI 인프라의 3대 기회와 위험 요인

기업 특화 AI 인프라 구축 - 3대 기회 요인		
① 데이터 보안·IP 전용·프라이빗 환경에서 민감 정보 안전 처리	② 버티컬 AI 제조 도메인(OT) 데이터로 특정 산업 시장 선점	③ 기업 전용 AI 독자 sLLM·맞춤 인프라로 중장기 생산성 격차 결정
↓		
그림자 - 병존하는 하방 위험		
① 종속의 역설 하단 스택(칩·인프라)의 해외 플랫폼 의존 심화	② 과투자 위험 수익화 지연 시 좌초자산·재정 부담	③ 계통·인허가 병목 전력 과부하·인허가로 투자 일정 지연

자료: 본문 내용 정리

로 올라갈수록 외국 생태계 의존이 심화되는 ‘중속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GW급 전력과 수조 원대 컴퓨팅에 대한 투자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수익화가 지연될 경우, 대규모 좌초 자산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셋째, 전력 계통의 국지적 과부하와 인허가 병목은 투자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상시적 위험 요인이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AI 전환 시대 재정 정책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AI 팩토리 시대의 재정 정책 과제

지능 생산 기반의 구축은 본질적으로 대규모 자본 투입을 전제하며, 그 상당 부분이 공공 재정과 정책 금융의 몫이다. AI 팩토리 시대의 재정 정책은 ‘공급 부문 투자’와 ‘수요 부문 지원’을 이원적으로 설계하되, 재정 부담과 민간 유인 사이의 정교한 균형 조율이 필요하다.

1) 공급 부문의 투자:

국가 컴퓨팅·전력망의 재정 소요와 배분 원칙

정부는 2026년 AI 관련 예산을 총 9.9조 원 규모로 편성해 전년 본예산(3.3조 원)의 약 세 배로 확대했고, 이 가운데 GPU 등 컴퓨팅 자원 확보에 2조 원대 사업(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 등)을 배정하여 2028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이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⁴ 총사업비 2.5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정 관점의 핵심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개별 기업이 산발적으로 GPU를 조달하기보다 국가가 대량 구매로 협상력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규모의 경제’가 재정 효율에 유리하다. 둘째, 자산의 소유·운영 구조를 명확히 하여 재정 투입 자산이 저활용되지 않도록

록 가동률과 성과 지표(SLA)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 전력망·계통 보강 투자는 데이터센터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 인프라 관점에서 장기 재정 계획에 편입되어야 한다.

2) 수요 부문의 지원:

컴퓨팅 바우처와 중소·중견기업 격차 해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요 기반이 취약하면 투자 효과는 반감된다. 특히 자체 GPU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컴퓨팅 격차 해소가 관건이다. 국가가 확보한 컴퓨팅 자원을 학계·연구계에는 무상, 산업계에는 시장가 대비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방식과, AI·클라우드 바우처를 통합한 ‘윈스톱 바우처’ 같은 수요 지원 수단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재정 지원은 단순 요금 할인을 넘어, 도메인 데이터의 표준화와 특화 모델 개발까지 연계하는 ‘패키지형 바우처’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3) 균형점: 재정 부담과 민간 유인의 조율

모든 소요를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2026년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인허가 등 비재정적 병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합을 설계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은 직접 투자와 세제·보증을 통한 민간 유인, 그리고 민간 위험 부담(Risk-Sharing)을 정교하게 배합하여, 최소한의 재정으로 최대한의 민간 투자를 유발하는 마중물이 되는 데 있다. 국가 컴퓨팅 센터의 민간 지분 확대 개편은 이러한 균형 모색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025-2026 글로벌 AI 인프라 전략 및 소버린 AI 트렌드 분석”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AI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2026.3)

『호서대동사목』을 통해 본 대동미의 지출구조 - 중앙편

이번 호에서는 대동법이 조선 후기 중앙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색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동법의 시행령이라 할 수 있는 『대동사목』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호서대동사목』은 김육(金堉, 1580~1658)의 주도로 효종 5년(1654)에 간행된 대동사목으로서, 이후 간행된 『전남도대동사목』과 『영남대동사목』의 모본이 된 자료이다.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사학전공 부교수, 역사학자

세입과 세출의 청사진 - 『호서대동사목』

『호서대동사목』은 김육의 서문과 총 82개 조항의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조항은 호서대동미를 출납하는 호서청(湖西廳: 호서대동미를 출납하는 선혜청)의 설립과 도제조와 제조, 낭청 이하 하급 관원의 직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 6, 7조항은 대동세 수취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동미의 원수는 매년 시기결수에 따라 정하며, ① 전답 1결당 봄, 가을에 5두(斗: 말)를 거두어 서울과 지방의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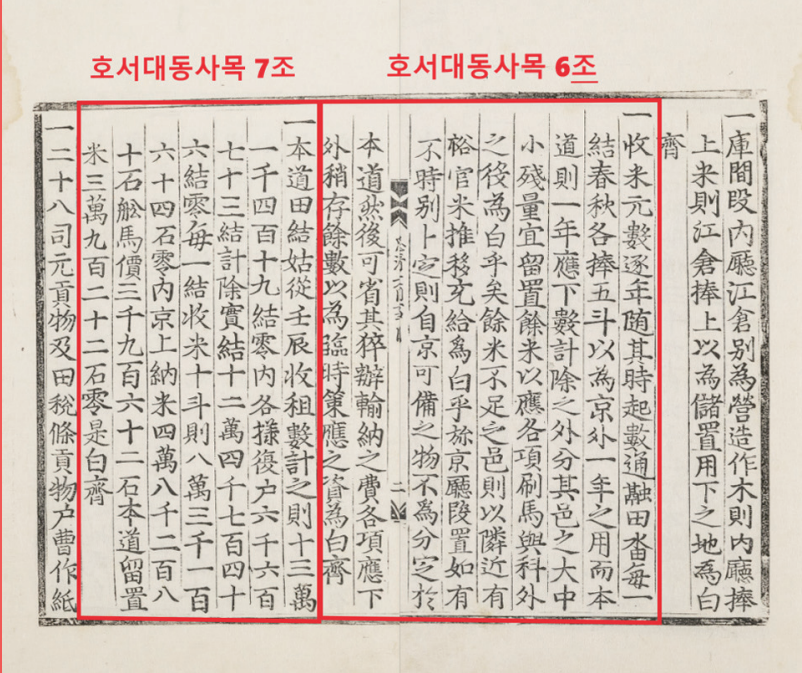
용도로 삼는다. ② 본도의 한 해 지출해야 할 수를 제하고 남은 것은 대, 중, 소, 잔(읍의 규모)을 구분해 여미(餘米: 남은 쌀)를 비축해 두게 하여 각종 쇠마(刷馬: 지방에 배치한 관용 말)와 과외의 역(役)에 응하도록 한다. 여미가 부족한 읍은 인근의 여유 있는 읍의 미곡을 옮겨 채워 지급한다. ③ 선혜청이 만약 불시에 별도로 분정하는 일이 있으면 서울에서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은 본도에 분정하지 않아야 갑자기 마련해 바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¹

6조는 ① 대동세를 1결당 10두(봄, 가을 각 5두)로 거두어 서울과 지방의 용도로 삼는다는 원칙과 ② 본

1 『湖西道大同事目』一(6조). 收米元數, 逐年隨其時起數通融, 田畝每一結春秋各捧五斗, 以爲京外一年之用. 而本道則一年應下數計除之外, 分其邑之大小中殘, 量宜留置餘米, 以應各項刷馬與科外之役爲白乎矣, 餘米不足之邑, 則以隣近有裕官米, 推移充給爲白乎於, 京廳段置, 如有不時別卜定, 則自京可備之物, 不爲分定於本道, 然後可省其猝辦輸納之費. 各項應下外, 稍存餘數以爲臨時策應之資爲白齊. 원문에는 각 조항에 번호가 없지만, 편의상 순번을 매겨 설명하였다. 이하 동일하다.

01
『호서대동사목』 6조와 7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호서대동사목』 중 대동미의
수취방식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조항이다.

02
『비변사인방지도(아산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공진창은 조선시대 충청도의
세곡을 모아 중앙에 상납하던
대표적인 조창으로 대동법 시행
이후 충청도 연해 고을의 대동미가
모이던 곳이다.





03

03

각궁(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각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옷과 부레, 쇠심줄은 대동법 시행
이후 대동미로 구입해 쓰는 품목에
추가되었다.

04

닥나무껍질(원주역사박물관 소장)
조지서 부속 토지에서 생산되던
닥나무 껍질 역시 공물로 전환되어
조지서 공인에게 값이 주어졌다.



04

도에서 한 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제하고 남은 대동미는 충청도 각읍의 여미로 할당한다는 내용, 그리고 ③ 선혜청(호서청)에서 추가로 거둘 일이 있더라도 호서청에서 알아서 마련하고 충청도에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충청도의 한 해 시기결에서 대동세를 거두면, 그 한도 내에서 서울과 지방의 경비를 감당하되, 지방 경비는 다시 본도 경비를 제한 뒤 각읍 규모를 고려해 차등 분할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선혜청에서 별도로 거두어야 하는 물품이 있으면, 충청도에 추가 징수하지 말고 선혜청에서 알아서 마련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대동세의 수입을 중앙-도-군현 사이에 배분해서 한 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점이 대동법이 갖는 재정사적 의의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7조를 살펴보자.

7조에서는 대동세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효종 3년(1652)의 수조안을 바탕으로 총 124,746결의 토지에서 83,164석의 대동미를 거두어 서울로 48,280석[경상납미]을 올려보내고, 본도에는 30,922석[본도유치미]을 유치해둔다는 것이다. 전라, 경상도와 달리 충청도는 경상납미를 본도유치미보다 더 많이 책정해 놓았으며, 서울로 운송할 때 드는 선마가(船馬價: 쌀과 포목을 운송하는 뱃삿과 말삿) 3,962석을 별도로 할애해 놓은 점이 특징이다. 선마가는 경상납미 대비 약 8.2%에 달하는 액수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선마가를 책정해 놓은 것일까? 대동미는 연해 고을의 경우, 인근 포구의 조창으로 옮겨 해운 수송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내륙 고을

은 서울로 통하는 대로를 따라 마필로 육상 운송하는 편이 낫다. 내륙 고을의 경우 운송 편의를 위해 쌀보다 가벼운 포목으로 바꾸어 바치도록 했다(『호서대동사목』 11조). 현물공납제 하에서는 공물을 수송하는 것 자체가 지방 각읍에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역으로 치부되었지만, 대동법 시행 이후 이 같은 운송역에도 반드시 비용을 책정해 백성을 무상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서울로 상납되는 대동미와 충청도 및 도내 각읍에 남겨진 대동미는 어디에 쓰였을까?

서울로 상납된 대동미는 어디에 쓰였을까?

서울로 상납된 대동미는 선혜청 부속 창고로 옮겨진 뒤 공물 주인에게 배분되어 왕실과 중앙 관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역 동원 비용에 쓰였다. 이에 대해서는 『호서대동사목』 8조에 그 항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² 이를 구분해보면 1. 중앙 관서에 바치는 공물(관서 행정)과 2. 진헌·진상(왕실 부양) 3. 역가(관서 행정)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1. 중앙 관서에 바치는 공물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8개 관서의 원공물 ② 전세로 거두던 공물 ③ 예조 관상감에서 쓸 각종 종이류 ④ 공조의 옷나무밭[漆田]에서 나는 옷[全漆] ⑤ 조지서의 닥나무밭에서 나는 닥나무 껍질[所出] ⑥ 장원서의 과일 ⑦ 전생사에서 쓸 황우 ⑧ 비변사에서 쓸 종지로 만든 방한용 옷[襦紙衣] ⑨ 공조에서 붓대로 쓸 대나무 ⑩ 내궁방의 부레[魚膠], 쇠심줄[正筋]

2 『湖西道大同事目』-(7조). 二十八司元貢物及田稅條貢物, 戶曹作紙役價, 其人, 歲幣上次木, 各官京主人房子雇價, 禮曹觀象監各樣紙地, 工曹漆田全漆, 造紙署楮田所出, 掌苑署果園結實, 典牲署黃牛, 備邊司襦紙衣, 宗廟薦新大小麥生兔, 各殿朔膳月令誕日冬至正朝臘肉進上, 內醫院牛黃藥材, 三名日進上馬, 順懷宮仁嬪房河東府夫人房祭肉生獐, 仁壽宮進排物膳, 工曹筆柄竹, 內弓房魚膠正筋, 迎接都監京婢房子價, 皆以米磨鍊, 自本廳上下, 一年應下之數, 通計四萬六千二百六十六石零是白齊。

28개의 중앙 관서³에 바치던 원공물은 이미 공안(貢案: 공물 장부)상에 항목이 수록되어 있었기에 『호서대동사목』에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그 밖의 추가된 공물만 항목을 명시해 놓았다. 예컨대, 전세 대신 바치던 공물[전세조공물], 관상감의 종이류, 공조의 옷, 조지서의 닥나무 껍질, 장원서 과일, 전생서 황우, 비변사 방한용 종이옷, 공조의 붓대로 쓸 대나무, 내궁방의 부레와 쇠심줄을 대동미로 구입해 쓰게 한 것이다.

추가된 물품은 일반 백성의 토지나 관서의 토지에서 별도로 거두던 작물로, 28개 관서의 공물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물납의 부담이 컸던 공물이거나, 민간에 부과하기에 손이 많이 가고 다루기 까다로운 제향·군수용 물자가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옷은 옷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으로, 각종 건축 공예품과 군수품에 방수와 접착 및 부패 방지용으로 쓰였다. 부레 역시 각궁 제작 시 무소뿔과 대나무를 붙이는 접착제로 쓰였으며, 쇠심줄은 활에 발라 탄성을 높이는 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한편 2. 진헌·진상은 청나라에 바치는 진헌에서부터 종묘에 바치는 천신, 왕실에 바치는 월령진상·납육진상·약재진상·진상마, 그리고 여러 궁방에 보내는 제향·물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에 바치는 세폐용 상등 및 차등 무명[上次木] ② 종묘의 천신에 쓰이는 보리와 밀, 생토끼 ③ 매달 바치는 월령진상 ④ 탄일과 동지, 정조에 바치는 납육진상 ⑤ 내의원의 우황과 약재 ⑥ 삼명일[탄일·정조·동지]에 바치는 진상마, 그리고 ⑦ 순회세자의 혼궁과 인조의 조모인 인빈김씨의 방[仁嬪房], 선조의 모친인 하동부부인의 방[河東府夫人房]에 보내는 제사용 생노루 ⑧ 인수궁(仁壽宮: 선왕의 후궁들이 모여사는 별궁)에 바치는 물선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징벌적 세공으로 바쳐야 했던 세폐용 고급 무명과 종묘에 바치는 천신용 햇보리·햇밀·생토끼, 도에서 매달 바치는 품질 좋은 물선진상과 국왕의 탄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바치는 납육진상, 내의원 약재로 바치는 우황과 약재, 세 명절[국왕의 탄일, 동지, 정월 초하루]에 바치는 진상마, 순회세자의 혼궁과 인빈김씨방, 하동부부인방에 보내는 제사용 생노루, 인수궁에 바치는 물선진상이 모두 중앙에 상납되는 대동미로 마련되었다.

공물은 중앙 관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종으로, 1년에 한 번 대량으로 상납되었던 반면, 진상은 각도의 감사나 수사, 병사가 책임지고 한정된 수량의 특산물을 매달 혹은 격달 간격으로 바치는 예현적 선물에 가까웠다. 진헌의 경우, 대중국 외교에 쓰이는 막중한 의례품으로서 현지의 특산물을 잘 포장해 중국에까지 가지고 이동해야 했기에 정부 차원에서 여간 세밀하게 신경 쓰는 품목이 아니었다. 이러한 진헌, 진상 물자를 시중에서 구입해 조달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현물공납제에 투영된 의례적 속성을 탈각시키는 조치에 다름아니었다. 이 때문에 호서대동법이 시행될 당시, 진상물자는 대동미로 마련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조정에서는 대동법 시행을 통해 진상물자를 선혜청에서 대신 바치도록 한 것일 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헌, 진상물자를 대동미로 구입하는 경로를 열어두었다.⁴ 왕실에 진배되는 현물진상은 조선 말기까지 온존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동법 시행 이후 진헌·진상물자의 상당수는 이처럼 대동미로 구입해 진배하는 품목으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3. 역가는 ①호조의 작지(作紙), 역가(役價) ② 기인(其人) ③ 경주인 방자(房子) 고립가 ④ 영접도감의 경비(京婢) 방자가 등이 이에 속한다. 우선 호조의 작지는 호조의 서리들이 전세를 거둘 때 문서처리 비용으로 떼어 받는 수수료성 경비에 해당하

며, 역가는 호조 소속 공인들이 전세곡을 배에서 내려 창고에 들일 때 떼어 받는 역가를 뜻한다. 기인은 소위 왕실과 정부 관서에 땀감을 공급하던 전문 조달 상인을 일컬으며, 『호서대동사목』의 기인 항목은 기인이 땀감을 진배할 때 바치는 작지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⁵

한편 경주인은 서울에 머물면서 지방의 부세 대납과 지방관의 심부름, 재정 지방민의 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던 이들을 일컫는다. 기인과 경주인은 고려시대 이래 지방 향리 출신이 서울로 올라와 역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대동법 시행 이후로는 향역(鄕役)이 아닌, 일정한 급료를 지급받는 역인으로 바뀌었으며, 이들이 부리는 방자 역시 역가가 책정되었다. 기인과 경주인은 조선 후기 재정 물류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커진 대표적인 직역군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한편 중국 사신 접대를 위해 임시로 설치된 영접도감의 여종과 방자도 대동미에서 역가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정된 대동미, 늘어나는 경비

지금까지 『호서대동사목』 8조를 중심으로, 서울 호서청에 상납된 48,280석을 어디에 썼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항목별로 얼마를 책정해 놓았는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호서대동사목』 8조 끝에 1년 예상 지출액수를 46,266석으로 계산해 놓

은 것을 보면, 각 항목의 단가를 계산한 뒤 이보다 조금 넉넉하게 상납미로 올려보낸 듯하다. 이처럼 호서대동법 시행 초기에는 경상납미만으로도 중앙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애초에 중앙의 공물가를 계산할 때 시중가보다 4~5배 높은 값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공물주인은 선혜청에서 지급받은 대동미로 물품과 역가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문제는 대동세를 거두는 시기결수는 매년 풍흉에 좌우되면서도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던 반면, 중앙의 경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대동사목에 수록되지 않은 공물을 추가하거나, 기존 공물의 수량을 늘리는 조치가 단속적으로 행해져 선혜청의 공물가 지출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동사목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선혜청에서는 공물가 지출 외에도 재정이 빈약한 관서의 급료성 경비와 여러 궁방의 경비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물, 역가를 대동미로 지불하는 급가(給價) 체제가 공식화됨에 따라 선혜청은 한정된 세입으로 중앙의 행정경비를 다각도로 지불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부담은 중앙에서만 나타난 문제는 아니었다.

다음 호에서는 『호서대동사목』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3 28개의 중앙관서는 1. 봉상시, 2. 기인, 3. 제용감, 4. 장흥고, 5. 의령고, 6. 풍저창, 7. 사포서, 8. 사도시, 9. 예빈시, 10. 공조, 11. 사촉서, 12. 선공감, 13. 전설사, 14. 내섬시, 15. 전생서, 16. 내의원, 17. 혜민서, 18. 사재감, 19. 전의감, 20. 군기시, 21. 교서관, 22. 상의원, 23. 내자시, 24. 분봉상시, 25. 조지서, 26. 장원서, 27. 귀후서, 28. 와서로 대부분 공물아문에 속한다.

4 전상욱, 2011, 『호서대동법 실시 전후 진상의 운영과 변화』, 『중앙사론』 34.

5 28개 관서의 원공물에 기인 항목이 하나의 관서 공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전남도대동사목』과 『영남도대동사목』에는 모두 기인 작지로 쓰여있기 때문이다.

퇴계 이황, 재정은 신뢰다

청렴과 절제가 국가재정을 지탱한다는 공공윤리 정신

재정은 숫자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백성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 일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퇴계 이황은 평생 청렴과 절제를 삶으로 실천하며, 공적인 것은 사사롭게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의 삶과 사상에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공공재정의 철학이 담겨 있다. 국가재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퇴계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본다.

정경환 동의대 철학과 명예교수, 정치철학

이름	이황(李滉)
호	퇴계(退溪)
생몰연도	1501년 11월 25일(연산군 7년) ~ 1570년 12월 8일(선조 3년)
국적	조선
활동	성리학자, 문신, 교육
주요 사건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성학십도』를 저술하고,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후학을 양성하며 조선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본관	진성(眞城)



“한 인간의 수양이 한 시대의 품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 깊이 기립니다.”

- 시민 이○래 -



남산 동상 6인,
온라인 추모관 바로가기
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서언

학자가 된 이후 참으로 많은 인물의 삶과 사상에 대해 연구했다. 한국의 경우 민족선각자, 독립운동가들 위주로 연구했고 또한 한국과 동서양의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사상과 철학을 연구했다. 이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 중 오롯이 자신의 정립된 사상을 현실의 삶에서 실천한 사람을 한 분을 언급 하라고 하면 단연코 ‘퇴계 이황’을 들고 싶다. 퇴계 이황(1501~1570)은 조선이 낳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이다.¹ 퇴계 이황에 대해 혹자는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은 없고 오직 주자학의 해설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그가 남긴 서간문, 언행록, 소, 차자와 저서들을 속독해보면 주자학에 대해 심취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자학을 독창적 시각에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사상체계를 구축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의 사상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정의론, 교육론, 정치론, 군주론 등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여기서는 퇴계의 사상을 필자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이 사상들과 연계해서 그의 재정철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의 삶 전체는 청렴과 절제를 표상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였지만 자신 외에 모든 이에게 온화하고 자애로웠다. 그리고 언행이 신중하고 깊이가 있어 위엄이 절로 나타나 다들 어려워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부정사건과 연루된 적 없고 일생 내내 청빈한 삶을 영위했다. 퇴계의 문인(門人)이었던 우성전은 퇴계에 대해 “그의 모든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켜,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를 사모해서 잊지 못하옵니다.”라고² 회고하고 있다. 그는 사사로운 욕심에 의한 명예심을 배척하고 일생 마음의 전일(全一)을 위한 학문에 매진하였다.³ 이 글은 퇴계의 국가재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그의 재정에 대한 철학을 알아보기 위해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의 사상의 대강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퇴계 이황의 생애와 사상

퇴계의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여 고집스럽게 걸어간 길이 아니었다. 그의 학문과 인품에 대한 조정과 세간의 기대감으로 인해 그는 조정에서 관직을 맡기면 마지못해 수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문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 사직을 거듭하였다. 자신이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 가서 학문에 전념하려고 해도 임금은 퇴계를 그냥 놔두지 않았다. 끊임없이 관직을 제수하였고 퇴계는 역시 끊임없이 사직의 소를 올렸다.

1 사상가와 철학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학문의 계통에서 ‘사상’이 보다 심화되고 체계화된 것을 ‘철학’으로 칭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상가 보다 철학자는 삶, 인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지평인 세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이황, 『국역퇴계집 II』(서울: 민족문화 추진회, 1977), p.318 ‘언행록(III)’의 ‘벼슬살이(居官)’ 중. 服人心志 使人愛慕 至今不忘耳.

3 퇴계는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문을 하는 도는 반드시 오랫동안 마음을 전일(全一)하게 한 뒤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마음으로 하다가 그만두다가 한다면, 그 공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황, 『언행록』 1. ‘지경(持敬)을 논함(論持敬)’ 중. 爲學之道必須全一悠久 然後乃成 而以一出入之心 爲惑作感輟之學.

“특히 58세 때 치사소(致仕疏)를 올린 뒤로는 모든 벼슬을 거둬 사양하며 받지 않았거나, 마지못하여 받은 벼슬이라 하더라도 대개 한두 달 만에 사퇴하든지 아니면 실제로는 취임하지 않은 채 벼슬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다른 벼슬로 옮겨지는 형편이었다.”⁴

퇴계 이황의 생애

퇴계의 70년 삶은 학문과 관직을 동시에 추구했던 한 사상가의 족적이다. 그의 삶은 검소, 절제, 검히, 온화, 성실, 청렴의 가치와 연계되어 있다. 그의 청렴함은 다음 일화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퇴계의 손자인 이안도의 증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풍기 군수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 행장이 쓸쓸하여 오직 책 두어 짐뿐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담았던 나무 상자들은 집에 온 다음 관졸들에게 되돌려 보냈다.”⁵ 이뿐이 아니다. 그는 일체의 상납품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군수를 그만두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선물도 거절하였다. 또한, 부임지마다 부인과 자제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퇴계는 의리에 맞지 않다고 동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강직함과 청렴함은 그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그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생에서 33세까지의 시기로, 출생과 공부의 시기이다. 퇴계는 1501년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를 여의었고,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과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사색이 깊었으며, 유교 경전과 성리학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단순히 과거시험을 위한 지식 습득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마음과 도덕적 삶의 근거를 탐구하려 하였다. 이 시기는 훗날 그의 철학과 수양론의 기초가 형성된 시기였다.

두 번째 단계는 33세부터 60세까지로, 과거급제 이후 학문과 벼슬을 병행한 시기이다. 퇴계는 34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았으며,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고 군주와 관료가 지켜야 할 도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벼슬살이로 인해 학문이 방해받는 것을 늘 염려하였다. 조정에서 관직을 제수하면 마지못해 나아갔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현실정치의 경험을 쌓는 한편, 자신의 사상을 더욱 심화하고 체계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60세 이후 사망할 때까지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한 시기이다. 퇴계는 말년에 관직을 대부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제자들과 경전과 성리학의 원리를 토론하고, 수많은 편지와 저술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전하였다. 그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4 윤사순, “퇴계의 생애와 사상,” 이황(지음)·윤사순(역주), 『퇴계선집』(서울: 현암사, 2001), p.14.

5 이황, 『국역퇴계집 11』(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318. ‘언행록(III)’의 “벼슬살이(居官)” 중. 解豐基家之日 行囊蕭然 唯書籍數駄而已 其所盛柶籠 到家 還付官卒.

1570년 70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문과 수양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삶은 학문과 실천, 청렴과 절제가 하나로 일치한 철학자의 생애였다.

퇴계 이황의 사상

퇴계의 사상은 몇 가지로 분류하기에는 방대하다. 여기서는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의 사상 특히 정치사상은 ‘무오사직소’(1558년)와 ‘무진육조소’(1568년)의 소(疏)와 ‘무진경연계차’(1568년)의 차자(筴刺)에⁶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의 사상을 알아보면 첫째, 위민론(爲民論)이다. 퇴계 사상의 근본은 위민론이다. 퇴계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邦本)”이라고⁷ 했다. 왕에게 올린 각종 소와 차자를 보면 처참한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절절히 언급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의 군주나 관료의 권력과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퇴계는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⁸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둘째, 덕치론(德治論)이다. 덕치란 법률과 형벌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도덕성과 솔선수범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가 “학문을 배우고 덕행(德行)으로 이룩하는 것이 바로 다스림의 큰 근본이다”라고⁹ 언급한 것은 덕치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왕도론(王道論)이다. 왕도정치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과 형벌로 백성을 억압하는 패도정치와 구별된다. 왕도정치는 군주가 먼저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도덕과 정의에 근거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다. 넷째, 위기론(爲己論)이다. 그는 학문을 하나 관직을 수행하나 항상 자신의 인격 완성에 전념했다. 학자나 공직자나 할 것 없이 도를 터득하지 못하면 개인적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퇴계의 생각이었다. 그가 “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옳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¹⁰ 한 것은 바로 위기론에 근거한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다섯째, 의리론(義理論)이다. 의리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올바른 도리이며,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적인 정의를 우선하는 원칙이다. 그가 “의리에 타당하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¹¹ 말한 것은 모든 언행의 근본에 의리론이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여섯째, 거경론(居敬論)이다. 퇴계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敬)’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경은 퇴계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학자나 군주나 할 것 없이 항상 “경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¹² 그는 강조하고 있다. 거경은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으면서 말과 행동을 삼가는 태도를 말한다.

6 차자(筴子)는 일반 소, 즉 상소와 달리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상소문을 지칭한다.

7 이황, 『국역퇴계집 I』(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p.126. ‘차자 무진경연 계차 I’ 중. 邦本.

8 위의 글. 爲拯民生塗炭之命之計.

9 이황(저): 장기근(역해), 『퇴계집』(서울: 홍신문화사, 2003), p.95. ‘무진육조소’ 중. 豈不以學問成德 然治之大本也.

10 위의 책, p.96. ‘무진육조소’ 중. 此道之所以不傳 治之所以不古也.

11 위의 책, p.405. ‘언행록 제2권’ 중. 義有未安 決不可爲也.

12 위의 책, p.96. ‘무진육조소’ 중. 至如敬爲本.

퇴계 이황의 재정철학 - 그의 생애와 사상에 나타난 재정론

퇴계는 오늘날의 의미에서 재정학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소와 차자, 언행록과 실제 관직생활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의 목적과 운영원리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재정철학은 그의 사상인 위민론, 덕치론, 왕도론, 위기론, 의리론, 거경론과 청렴하고 절제된 삶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국가재정의 목적은 백성의 삶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러한 퇴계의 재정철학은 그의 위민론에 근거한다. 퇴계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고를 채우는 것 자체가 재정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조세와 부역이 지나쳐 백성의 생업이 무너지면 국가재정의 기반도 약화된다. 좋은 재정은 많이 거두는 재정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재정이다.

둘째, 국가재정은 군주와 관료의 도덕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재정철학은 퇴계의 덕치론에 근거한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집행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재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퇴계가 풍기 군수를 그만두고 책 몇 집만 가지고 돌아오면서 관청의 나무상자까지 되돌려 보낸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엄격히 구분한 그의 청렴성을 보여준다.

셋째, 군주는 국가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재정철학은 퇴계의 왕도론에 근거한다. 국고는 군주의 사유물이 아니며 궁중의 사치나 군주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군주가 사치하면 관료들도 이를 본받고 그 부담은 결국, 백성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군주는 백성에게 절약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검소함을 실천해야 한다.

넷째, 공직자는 국가재정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재정철학은 퇴계의 위기론에 근거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 재정은 낭비된다. 공직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백성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다섯째, 재정의 부담과 혜택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철학은 퇴계의 의리론에 근거한다. 힘없는 백성에게만 세금과 부역을 부담시키고 권력층과 특권층이 이를 회피하는 것은 의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예산을 편중하는 것도 공공재정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재정은 정치적 친소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가재정은 두려운 마음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철학은 퇴계의 거경론에 근거한다. 재정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작은 지출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과 결산의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과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퇴계의 재정철학은 청렴과 절제에 기초한 신뢰의 철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백성은 자신이 낸 세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된다고 믿을 때 국가를 신뢰한다. 결국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은 국고의 규모가 아니라 백성이 국가를 믿는 신뢰이다.



서울 남산공원에 세워진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 퇴계 이황 선생 동상

재정이 만드는 균형발전의 길 “재정의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다”

이 책은

비어가는 도심과 외곽으로
팽창하는 도시 구조를
진단하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제안하는 도시 교양서

『사대문 안 인구 30만 프로젝트』

황두진 저 | 해냄(2026년)

조선 시대부터 서울의 중심이었던 사대문 안이 오늘날 업무 기능만 남은 ‘비어 있는 도시’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원·구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외곽은 계속 비대해지는 도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각종 제도와 정책에 의해 강화됐다고 진단한다. 주요 일자리는 여전히 도심에 남아 있지만, 주거지는 점점 멀어지면서 이동 거리와 통근 시간이 늘어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에도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도시의 밀도와 일상의 농도를 함께 높이는 대안으로 ‘사대문 안 인구 30만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기존 도심의 주거와 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사람과 일상이 다시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사대문 안 인구 30만 프로젝트



사람 중심의 도시 변화를 읽는 핵심 포인트

- **도심은 왜 비어가고 있는가:** 원·구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외곽은 계속 확장되어 온 도시 구조의 변화와 그 배경을 들여다본다.
- **멀어진 집과 일터, 달라진 일상:** 주거지와 일터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장거리 이동과 통근 문제를 통해 현재 도시 구조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 **다시 사람이 살아가는 도심:** ‘사대문 안 인구 30만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의 주거와 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밀도와 일상의 농도를 함께 높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7월에는 중앙과 지방, 교육이 함께 만드는 재정의 역할을 돌아본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지역 간 격차 등 사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재정은 국민의 삶과 지역의 성장,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뿐 아니라 공공의 가치와 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시대 속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두 권의 도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멸 시대 폭식 사회』

박현갑 저 | 리북(2024년)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수도권은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국가의 주요 자원과 기회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폭식 사회’로 정의하고, 수도권의 비대화와 비수도권의 기회 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판교라인과 기흥라인, 지역 의료의 위기, 지방대학의 쇠퇴 등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을 짚고,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전환과 실천 방안을 제안하며, ‘폭식 사회’를 넘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지역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보는 책이다.

이 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현실 사회 교양서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읽는 핵심 포인트

-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자원과 기회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현실을 짚어본다.
-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환:** 지역의 자율성과 성장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한다.



NEWS

2026 July vol. 115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성료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7월 1일(수) 서울 중구 본원 8층에서 임직원과 기획예산처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윤석호 원장의 기념사와 박홍근 장관의 축사에 이어 재정원의 10년 발자취를 담은 기념영상 및 직원 인터뷰 영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10주년 기념식은 2016년 개원 이후 재정원이 이룩한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가 재정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자리였다.

윤석호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축적한 재정 전문성과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정의 모든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더 나은 재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히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임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로운 10년을 향한 각오를 다졌다.

NEWS

2026 July vol. 115

한국재정정보원, '제6회 기획재정부문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7월 3일(금) '제6회 기획재정부문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재정경제부가 주최하고 재정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2021년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개최된 이후 6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 대회에는 기획재정부문 8개 기관(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8개)과 공공기관 디지털 협력 협의회(PDC) 정보보안 소위원회에 소속된 5개 공공기관(한국장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을 포함하여 13개 기관에서 총 32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2주간 온라인(비대면) 사전 강의 및 실전형 사이버 훈련을 실시해 최신 해킹 트렌드와 방어 기법을 사전 학습하고, 가상의 기업 환경에서 최근 발생한 통신사 및 쇼핑몰 침해사고를 재현한 해킹 문제를 출제해 참가자들은 취약점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가해지는 해킹 공격을 방어함으로써 실무 대응 능력을 겨루었다.

애독자 코너

• 2026.07 •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WOW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 ① 국고보조금 ② 지방교부세
- ③ 지방채 ④ 주민세



힌트!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과 관련된 힌트를 찾아보세요.

우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6.7.31. ~ 8.14.

★ 지난호 정답: ③ 국방예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2008 010-****-7498 010-****-0213
010-****-4135 010-****-4515



Q ♥

#나라재정#dBrain*

응모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구독 정보 변경 및 기타 월간『나라재정』과 관련한 궁금증은 02-6908-8632로 문의 바랍니다.

2026 김천 포도 축제

with
복숭아
자두!

2026.8.14.(금)~8.16.(일)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일원

WOW!

+ 오존 고농도 시기(5월~8월) +

나의 건강 루틴

0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오늘 오존
관찰을까?



02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오늘
체육은
실내수업!



03

승용차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오늘은
내 차
쉬는 날!



04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오존 주의보 발령 시)

운동은
퇴근 후
홈트!



05

스프레이·드라이클리닝·페인트·시너
사용 줄이기

빨래는
집에서!



06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저녁 주유

스프레이
대신
붓이나 롤러
사용!



airkorea.or.kr

에어코리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